

第256回國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8 號 (定期會)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5年11月3日(木)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6년도 예산안(계속)
 -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審查된案件

- | | |
|-----------------------------|----|
| 1. 2006년도 예산안(계속) | 1 |
| 가. 외교통상부 소관 | |
|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1 |
|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 |
|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 |
| 1. 2006년도 예산안(계속) | 20 |
| 가. 외교통상부 소관 | |
|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20 |
|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 |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임채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산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위원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상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외교통상부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 그리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외교통상부의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외교통상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2006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 제안설명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내년도에도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하여 우리의 국익을 신장하고 국력에 상

용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 외교 추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정부의 외교 부문 국정과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앞당기는 외교적 기반 확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 외교의 최우선 당면과제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의 자유화 확산과 더불어 지역주의 추세도 점증하고 있는 복잡한 환경하에서 선진 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가운데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경제·통상 외교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신망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신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강화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지난 9월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후 회담 참가국들이 긍정적인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하에 관련국들과의 협의 및 검토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국들의 조치 내용을 합리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공동성명이 포괄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제5차 6자회담이 공동성명 합의 내용대로 11월에 북경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로서는 그간 6자회담 과정에서 해 온 것처럼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기반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자세로 회담의 진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핵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공동성명의 완전 이행까지는 적지 않은 기복과 도전도 예상됩니다.

정부로서는 진지하고도 냉철한 자세로 향후 협상에 임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로서의 위상과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은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실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안 핵심과제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평화번영 정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동북아 협력 증진에 유리한 역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향후 적절한 시점에 한반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 상황을 보아가면서 6자회담과는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과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정세를 안정화하고 평화정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역내국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협력 기반 확충을 위해서 역내 국가 간에 무역, 투자, 에너지, 철도,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의 공동협력 및 유관협의체 구성 등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는 그간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 등 동맹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한 것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안보정책구상회의 등을 통해서 바람직한 미래 한미 동맹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는 금년 들어서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경색 국면이 지속되었는데 지난 10월 27일에서 29일간 개최된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일촉의 사려 깊은 대처를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역사인식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일촉에 지속 전달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건설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과는 고위인사 교류 확대를 비롯 정치·외교·안보·경제·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구려사·국군포로·탈북자 문제와 양국 관계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마찰 문제 등도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큰 틀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통상·투자, 에너지·자원, 우주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러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사업을 계속 시행하여 양 국민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이라크 재건 지원과 대테러 대응 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에 파견된 우리 파병부대는 지역주민 및 쿠르드 지방정부의 환영하에 평화·재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라크 중앙정부도 우리의 추가 파병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수차례 전해 온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라크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에 따라 2007년 까지 총 2억 6000만 불을 이라크의 재건복구 원조금으로 공약하였으며 금년 중 5000만 불, 내년에는 4500만 불 상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테러가 국제사회의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대테러 협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특히 해외의 우리 국민과 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 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국제경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해서 안정적인 해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장개방으로 국내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고자 현재 20여 개의 주요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방침입니다.

범정부적 대응 체제를 통해서 농업, 서비스 등 DDA 주요 협상 분야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협상회의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개도국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ODA는 우리 기업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인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외교통상부는 에너지 수급처의 다원화, 해외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유 도입처인 중동 및 동남아 산유국과의 기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자원부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자 무대에서의 외교활동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테러리즘, 군축, 인권, 민주주의, 개발 및 유엔체제의 개혁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자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익과 직결된 다자외교 사안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번영하는 민주국가라는 국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다자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다자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제기구 참여 강화를 통해서 국제문제를 관리하는 경험과 인적자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국제기구 이사국으로의 선임 및 사무국 고위직에 대한 우리나라 인사의 진출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견국가로서 응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 대해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기구분담금 체납문제의 조기 해소가 필요합니다. 분담금 체납이 우리의 국제기구 내 역할 강화 노력에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부는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 내, 지역 간 협력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부응해서 ASEM, ASEAN+3, ARF, FEALAC 등 지역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11월 18에서 1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 APEC 정상회의는 무역·투자자유화 진전 방안은 물론 대테러, 조류독감, 재난대응 등 인간안보 문제와 반부패 이슈도 다룸으로써 APEC 이 역내 경제성장과 국민후생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최고위급 정책포럼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APEC의 창설과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로서 내년에도 APEC 정상회의에 적극 참가하고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 채택한 APEC 회원국들의 무역·투자자유화 향후 계획인 부산로드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적극 주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외교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류의 급격한 확산에서도 보이듯이 해외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평가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문화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통문화 및 대중문화의 우수성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문화외교 활동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한·불 수교 120주년 행사 및 한·영 상호방문의 해 행사 등 주요 계기별로 우리 문화가 널리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류의 공공성 및 문화교류의 쌍방향성을 제고함으로써 한류가 앞으로도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통문화 및 대중문화 확산의 장기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영사시스템 전반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축된 영사 콜센터와 본부 신속대응팀의 활동과 함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해외위급특보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해외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양질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부와 재외공관의 영사전담 인력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내의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차원에서 여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개정법안의 국회 상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여권의 위·변조 방지와 품질개선을 위해서 금년 9월 30일부터 사진전사식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서 사진전사식 여권보다 더욱 개선된 전자여권 즉 생체인식여권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증가일로에 있는 670만 재외동포의 지원수요에 대응하고자 동포들의 권익신장, 정체성 유지 및 모국·동포 간 호혜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역시 일련의 구조조정 및 역량강화 방안 수립을 통해서 동포지원사업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세기에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외교부의 자체 혁신 노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확정된 외교통상 기능강화 방안에 따라서 외교부 내에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외교통상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외교수요 변화에 따른 기능 및 인력 재조정, 인사제도 및 외교행정 운영시스템 혁신, 조직개편 작업 등 전반적인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9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외무영사직렬 신설을 통한 대국민 영사서비스 향상 및 외교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혁신 노력을 기반으로 외교통상 역량을 꾸준히 증대시켜 급변하는 국제정치 안보 및 경제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위상도 제고하는 실리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외교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2006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에는 세출예산이 금년 대비 3.1%가 감소한 8731억 1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5%가 증

가한 1040억 7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제교류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액 기준으로 금년 대비 9.8% 증가한 98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안 제출 후 한국국제협력단 신청사 건립, 대미 홍보강화, 유엔 외교활동 강화,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희생자 유골조사 및 봉환 등 중요성이 크고 시기적으로 시급한 신규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시이들 사업이 내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보내 주신 외교통상부와 외교통상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미리 다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동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동 법안 통과 시 수반되는 예산 반영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 개요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그리고 국제교류기금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권인혁 이사장이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장 김성환 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베이지색 얇은 책자 2006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면 감사합니다.

먼저 1페이지 외교통상부의 2006년도 예산안 기본방향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2006년도 예산안의 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040억 7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905억 1900만 원 대비 15%인 13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여권발급 및 영사업무 수수료 예상수입액이 2005년에 881억 원에서 2006년에 1024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세입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총 규모가 8731억 1000만 원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9011억 2500만 원 대비 3.1%인 280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1911억 3800만 원, 사업비 6819억 7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주요사업비가 4920억 9800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기본사업비 1898억 7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3페이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본부 예산안은 5456억 5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의 예산은 3274억 54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 및 미 달러화 예산 간의 구성비율을 보면 외교통상부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달러화 예산이 4382억 5800만 원, 미국 달러화로는 4억 3826만 달러로 전체예산의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전 2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 성질별·사업별 세출내역에 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7개 신규사업과 63개 계속사업 등 모두 79개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페이지 항별·세항별 세출내역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항별·세항별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장 김성환 그러면 세출 예산 책자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에 있는 부

서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거기도 보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장 김성환 그러면 책자 21페이지 대외협력 예산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구분담금과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그리고 재외동포재단 출연 예산으로 구성된 대외협력 예산은 2005년도 대비 10.5%인 337억 원이 증액된 3561억 5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 전체 예산의 40.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중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은 1566억 6500만 원으로 2005년 대비 6.5%, 달러 기준으로는 22.4%인 95억 17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외 개도국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은 2005년도보다 15.9%인 26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909억 7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개도국 지원 및 1666명의 청년봉사단 파견 예산 407억 원과 남아시아 재난복구 지원비 2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외동포재단 출연금은 모두 85억 1900만 원으로 외형상으로는 2005년에 비해서 19.6%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포재단의 사업비가 국제교류기금에 146억 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총액 기준으로 5.6%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외협력예산이 이와 같이 2005년도 예산 대비 증액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체납금의 조기 해소 및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에 상응하는 기여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대외협력비가 지속 증가되어야 한다고 외교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는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의 국유화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으로 2005년 대비 33.1%인 9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98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06년도에 주필리핀, 주 쿠웨이트대사관 및 주 OECD 대표부에 대한 신규사업 예산 185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한국국제교류

재단 이사장 권인혁입니다.

2006년도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 기반학대 및 한국전문가 육성사업, 인적교류, 문화교류, 출판자료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987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자체수입 537억 9000만 원과 여유자금회수 45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49억 원과 기여금수입인 경상이전수입 378억 원,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1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은 2005년도 대비 9.8%가 증가한 987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영비는 기금관리비와 사업운영비를 합하여 76억 8900만 원으로 2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정보화사업비 증가와 금년부터 설치된 해외사무소의 연간운영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사업비는 407억 2600만 원으로 해외한국학 진흥 140억 9700만 원, 국제교류협력증진 120억 2900만 원, 재외동포교류지원 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2%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재외동포교류지원은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으로 2005년도 113억 원 대비 29.2%가 증가하였습니다. 여유자금운용은 503억 75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출계획의 여유자금운용 503억 7500만 원에서 수입계획의 여유자금회수 450억 원을 제외하면 2006년도 국제교류기금에 실제 적립되는 것은 53억 7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교류지원과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국제교류재단의 순지출계획은 338억 15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4 내지 5페이지 및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 각 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주요 검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1% 감액된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9011억 원 대비 3.1% 감액된 8731억 원으로 이는 정부 전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5조 7029억 원 중 0.60%에 해당됩니다. 이는 기준환율 변경과 APEC 행사 종료에 따른 관련 예산이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하여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증액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간 국회의 예결산 심사시 외교통상부의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서 차지하는 외교통상부의 비중이 전년도 0.66%에서 0.60%로 낮아지는 등 200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교활동비의 책정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계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이 3급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외교활동비는 외교활동에 소요되는 특수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252억 8600만 원 대비 21.2% 감액된 199억 1900만 원이며 감액된 주된 사유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 46억 원이 삭감된 것에 기인합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 대비 21.2% 감액된 것은 그간 외교활동비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지적에 대한 개선 조치로 보이나 아직도 보안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오·만찬 등 연회비용, 국제관계 자문대사 활동비 지급 등 일반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도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외교활동비를 3급 비밀로 편성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공개 교섭과 관련된 사업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지원문제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지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령에 의하여 2005년 1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가 행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연

구소의 설립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책정된 2006년도 예산 50억 원은 2006년 3월로 예정된 제주 평화연구원 출범 시 기금의 일부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006년도부터 향후 3년간 외교통상부 예산에서 1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인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지원 예산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외교통상부 소관으로 편성된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집행용도가 불명확한 특수활동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상회의 참가 예산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 시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200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79억 100만 원 대비 36% 증액된 107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특수활동비는 16억 8000만 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집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집행용도가 불명확한 실정이고, 외교통상부가 필요한 부분은 일반사업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통령비서실이나 경호실 사용분은 직접 해당기관에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 방식에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남미자원개발 지원센터 설립 관련입니다.

남미자원개발 지원센터 설립사업은 광대한 미개발 에너지, 광물 및 수산자원 등을 보유한 남미지역과의 전략적인 자원개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남미지역 내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06년도 예산안은 1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1억 700만 원이 남미지역 자원조사를 위한 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미자원개발 지원센터설치의 목적이 종합적인 남미 자원개발 조사 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한·남미 간 자원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등으로 적극적인 해외자원 확보 및 자원외교가 필요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현지 자원에 관한 연구 등이 각 부처 공무원의 3 내지 6개월간의 순환근무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재외동포단체 지원 관련입니다.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은 전 세계 1000여 개 재외동포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51억 5000만 원 대비 11.9% 증액된 45억 3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재일민단 지원 35억, 기타지역 동포단체 지원 10억 3500만 원입니다.

그간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재일민단 지원과 기타지역 재외동포단체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일민단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이를 기타지역 재외동포단체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재일민단지원금은 5억 원 감액하면서 그 액수만큼 기타지역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이 증액 편성되지 아니하고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책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04년도에 1182개 단체에 대하여 평균 900불을 지원한 것은 효용성이 의문시되는 소액지원방식인바 해외동포의 거주지역 및 국가의 특성과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현안문제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예로 미주지역 동포들은 그들의 주류사회 진출과 한인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많은 수의 우리 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보안필름 등 소모품 구입단가의 적정성 문제 등입니다.

여권사진전사시스템사업은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진부착식 여권 발급에서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이 내년에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9억 2700만 원 대비 784.6% 증액된 82억 원입니다.

보안필름 등 사진전사 소모품 구입단가는 조달청과 삼성SDS 간의 수의계약에 따라 2004년 11월 1차 계약 시 3497원이었으나 불과 약 7개월이 지난 2005년 7월 2차 계약 시에는 3691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금년도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으며 200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단가는 2005년에 계약된 3691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3546원이 반영되었는바, 계

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생체인식여권 시범발급을 위한 경비로 연구개발비 2억 원, 보안모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억 500만 원, 공백여권 제작비 1억 원 등 5억 5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되었는바, 현재는 여권사진전사시스템을 통한 신여권 발급이 비로소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동 사업이 정상궤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안정화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체인식여권 시범발급은 국제적 표준이나 국내 공감대 등이 충분히 형성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8, 9번 항은 생략하고, 7페이지 재외공관 증설 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97년 외환위기 발생 후 범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노력의 일환으로 총 22개 재외공관을 감축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교민 등 재외국민 보호활동 제약, 제3세계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저해,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역량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현시점에서 재외공관망을 적극적으로 재정비하고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강하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2006년도에 주예멘대사관 등 8개 공관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는 주자메이카대사관 등 7개 공관, 08년에는 주볼리비아대사관 등 7개 공관 등 총 22개 공관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한국 국제협력단 신청사 건립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국 국제협력단 신청사 건립 추진사업은 99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공포에 따라 외교부 산하기관 지방이전 지정 이후 잠정 보류되었다가 2005년 6월 지방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정부 정책이 한국 국제협력단의 현 부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정부는 부지 매각으로 충당하려던 건축비를 지원하며 외교부는 국제연구교류단지 부지를 협력단에 무상 대여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선급금 등 신축경비 일부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8페이지 12번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특별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미 홍보 강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최근 한미 동맹관계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고 그 외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홍보회사와 계약 체결을 통해 미국 사회 저변에 우리 정책을 보다 실효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가 판단하고 있는 소요예산은 약 12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일본 내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조사 및 봉환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4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소재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한일 간 과거사 청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바, 현재 일본 소재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에 대한 종합적 실태 파악 및 국내 봉환 등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 정도이며 세부 내역은 박사급 전문인력 고용 1억 원, 방문·실태조사 5500만 원, 국내 봉환 4500만 원, 희생자 유족 추도순례 5000만 원, 위령비 건립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대유엔 외교 강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년도는 아마도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의 우리 위상을 획기적으로 거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예산 확정 후 입후보가 예상되는 유엔사무총장직에의 아국 인사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정책홍보실의 기본예산에 최소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여 대유엔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기금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재원 확충과 안정적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제교류기금은 해외 한국학 지원 등 재단 국제교류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14년간 적립된 것으로 그동안 국회는 재단의 소극적 사업 수행을 지적하여 왔습니다마는 재단이

내년도 목적사업에 20% 이상 증액 편성한 것은 적극적 사업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바람직한 편성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재단은 면밀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단이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기금 규모의 잠식이 예상되므로 이로 인하여 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외사무소 운영은 해외 주요국 우리 공관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현지 상황 및 수요에 기초한 사업을 추진하고 현지화를 기반으로 한 신규사업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예산안은 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2% 증액된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 심의 시 미국 중국 등 2개국에 해외사무소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실제로는 2005년도에 미국 베트남 러시아 독일 등 5개의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바, 이와 같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해외사무소 설치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국회의 예산·기금 심의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베트남 러시아 독일의 경우는 금년 10월에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2006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 후 추진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해외사무소에 대하여는 재단 측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은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 내년도에 제주평화연구원 설립에

50억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에 재외공관을 8개 증설하게 돼 있고,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한 7개……

○김문수 위원 2007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국회에서 여야 간에 늘 재외공관을 더 늘리고 외교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외교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공관을 늘리고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3.1%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상태에서 다른 공관 예산도 지금, 예를 들면 주예멘대사관 등 8개 공관을 내년에 하게 돼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미반영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국회에서 모두 다 중점적으로 하기로 돼 있고 국민적 합의가 돼 있는 공관을 늘리는 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제주평화연구원 예산은 증액해서 5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주평화연구원을 설립하는 것하고 재외공관 증설·복원시키는 것은 별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예산이 별도라는 게 아니라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올해 1월 7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구원 설립을 위해 외교부가 특별히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김문수 위원 그것 때문에 한 것이지, 이것이 원래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1억밖에 요구 안 한 건데 다시 50억으로 늘려서 올린 것 자체가, 이것은 물론 대통령 지시가 있으시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장관은 지시를 받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공관은 설립하기로 해서 다 돼 있는데 이런 예산도 하나도 안 넣어놓고 이것은 왜 우리 외교부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 않은 것 아닙니까?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공관 설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행정 절차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관 22개를 앞으로 3년간에 복원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행정자치부 등 중앙인사위원회하고 협

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법적으로 올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정부 간에 협의가 끝나면 다시 또 예산을 예비비든지 이렇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제주평화연구원은 협의가 다 끝나고 절차도 다 마쳤고,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주도를 국제자유지대로 하는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부 내의 의견 수렴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까지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장관님, 여기 외교관도 많이 계시고 여야 위원들도 다 있지만 누가 지금 그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제주평화연구원은, 이미 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연구원하고,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원 해서 여러 가지 국책연구원 업무하고도 다 중복되고 있고, 다지적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여기에서 소신껏 바로 밀고 나가셔야지 최고 외교관이라고 해서 대통령 지시대로만 무조건 그냥 예스 하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것은 대통령 지시보다도 정부 내에서 금년 1월에 대통령을 모시고 장관들 간에 재원배분회의를 했었을 때에 이미 그러한 입장이 결정됐었고 공관 증설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정부 내의 절차에 따라서 하고, 아마 전체적인 조정이 끝나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다시 신청하더라도 내년에 실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장관님,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것 이 저는 장관님이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이지요.

첫째, 외교부의 핵심적인 기관이 재외공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가장 핵심적이고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지적해 왔고, IMF 이후 없어진 공관을 다시 복원하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도 있고 여야 간의 합의도 있는 핵심적 기관에 대해서는 준비 안 됐다고 미반영, 하나도 안 하고 예비비로 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

체가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중복된 업무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먼저 배정해 놓았다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더 토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북한 인권 관련해서 예산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송환경비, 외교활동비가 작년 13억이 23억으로 일단 10억은 것은 잘됐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부족하지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제대로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유엔 인권위 참가 부분도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외직명대사의 숫자도 늘리고 활동비를 더 순증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박경서 인권대사, 인권대사가 북한 인권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확실하게, 대외직명대사 중 인권대사의 활동 중에서 북한 인권 부분에 좀더 주력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주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유엔총회에 제출된 대북 인권결의안을 유럽연합에서 제기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중순 경에 표결할 것으로 예측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다분히 높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위원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어제 상정이 되었고 아마 여러 관련국들 간에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통과될지 여부는 제가 지금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김문수 위원 높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높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높다, 낮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하고요. 여기에 이견이 있는 국가

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문수 위원 EU에서는 만장일치로 올라온 것 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EU 25개국이 다 이의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EU의 명의로 올라왔으니까 일단 그렇다고 봅니다.

○김문수 위원 자, 미국이 찬성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일본도 찬성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주요국 중에서 반대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아직, 각국의 입장을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김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외교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무대책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지요. 자꾸 피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일전에 언론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기권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직 입장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결의안이 토의되었을 때 우리가 취했던 입장과 한반도의 제반 상황, 또 6자회담의 진전, 남북한 관계, 또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태도 등을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취할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문수 위원 그것이 뭐니까? 지금 바로 임박했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 또 기권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문수 위원 작년하고 변화된 입장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53개국이 했지만 이번에는 총회 191개국으로 범위가 다르고 총회 의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기권하실 것인지 아니면 변화된 입장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직 그 문제는 정부 내의 관련 부처 간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봐야 됩니다.

○김문수 위원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요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다시 기권하신다면 이래 가지고는 국제적으로 아마 장관님 유엔 사무총장 되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는 하여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만한 계기가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 위원** 아니, 그러면 국제적으로 다수 국가가 모두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결의안 채택하는데 그것도 기권하는 장관이 어떻게…… 유엔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인권 문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유엔 뿐만 아니고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유엔이 인류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로서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러한 면으로 이제까지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 핵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 간의 분단 상황에서 특수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항상 우리가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 발전방향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 처리 문제라든지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국가 이익에 어떠한 것이 제일 바람직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 입장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만 지금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표명하면 핵문제가 안 풀린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인식이 우리 정부의 잘못된 기본인식이다 이것입니다. 그 점이 고쳐지기를 계속 촉구하고요.

올해 12월 8일부터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까지 프리덤하우스 주최로 서울에서 대규모 북한 인권국제대회가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부 차원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동향이나 이런 것을 봄면서 그때 필요한 경우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외교부의 대외직명대사인 인권대사의 참석을 요청할 경우에 참석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 이화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과 존경하는 정문현 위원께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여권 사진전사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여권 발급비로 282억 원, 사진 전사 시스템 관련되어서 82억 원, 그리고 생체인식여권사업 시범발급비로 5억 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장관께서 직접 보고하신 보고에서도 올해 9월 3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이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기술적인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제가 어제 영등포구청의 민원여권과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장관께서 굉장히 안이하신데 300명이 지금 접수를 위해서 구청 주변과 여권민원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 10시에도착하면 접수가 몇 시에 가능한지 아십니까? 오후 3시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후 3시에 접수가 가능하고, 또 10시에 도착해서 오후 3시에 접수가 가능한 것을 알고 돌아가면 아주머니들이 대기 순서표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팔아요. 2만 원에 팩니다. 그리고 대개 이렇게 전산 입력해서 시작되는 이 시스템에서 지금 여권 하나 만들어지는 시간이 몇 분 간격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국장님, 나와 보세요.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재외국민 영사국장입니다.

○**이화영 위원** 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장관께 질의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사진전사 시스템 여권발급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지금 사업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혼란은 있습니다마는 큰 흐름에서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위원 다소간의 혼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그렇습니다.

○이화영 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완전히 여권 대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짜증이나서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여권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급하게 외국 나가야 되는데 여권 발급받으려면 법정시한이 7일인데 지금 법정시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지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행기관에 따라서는 다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지금 8일 이상 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여권 발급받으려 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 8시에 가면 3시에 접수되어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 보면 또 그 다음날 오라고 그러고, 또 문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진 판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진을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예, 사전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위원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요.

○이화영 위원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여권 하는 데 어떤 사진 가져와야 된다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들 중에…… 거기 가면 사진 하나 가지고 가서 이 사진이 판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공익요원한테 계속 물어봐요. 오는 사람들마다 ‘이 사진이 가능한 사진이냐?’ ‘안 된다 다시 찍어 와라’ 아주 큰 혼돈입니다.

그것뿐 만인 줄 아세요? 여기 구청 여권 발급하는 직원까지도 8시, 9시까지 연장 근로 때문에 과로에 시달려서 왜 사업이 이 모양이냐고 엄청난 불만이에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예,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이화영 위원 어디 가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종로구청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가보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은 지금도 수시로 각 구청을 돌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제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여권 발급사업은 신속성보다는 여권의 안전성과 보안성에 역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여권 발급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혼란은 사업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의 업무 미숙도 다소 있고, 또 국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데서 오는 혼란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속도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 위원 국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이 되어서 학생들이 대거 몰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IT 강국에서 이런 정도 여권 하나 발급하는 데 적체가 나오고, 국민들이 무슨 외교부 실험대상입니까? 사진전사 시스템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는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하면…… 안전성과 보안성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되겠습니까?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안 느끼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느끼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겨울방학 때 여권 발급이 폭주할 텐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예산안에 들어온 예산액수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산 시스템상의 어려움이 시정됩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시간이 되면 안정이 되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권 발급하는 것이 과거 여권 시스템하에서는 7일 내에 발급이 가능했었

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도 여권을 이렇게 신속하게 발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2주 내지 3주가 걸리고 있고, 캐나다가 10일 내지 20일, 프랑스가 10일 내지 15일, 독일은 4주 내지 6주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여권 발급 초기에 있어서 현재 다소간에 혼란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위원 다소간의 혼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그렇습니다.

○이화영 위원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을 때 국장께서는 언제쯤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지금 이미 신여권을 9월 30일부터 발급하고 있는데 지금 한달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한달 정도가 경과했는데 이삼 주가 지나면서부터 급속도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대행기관에서는 구여권 발급 시와 비슷한 숫자의 발급량의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위원 제가 어제 갔다 왔더니까요. 갔다 오니까 300명이 대기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그런 현실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의 인원과 장비를 몇 배를 늘리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화영 위원 국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당장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정할 계획을 제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조금 더 기다려봐라, 보안성과 안전성 때문에 더 기다리면 언제인가 될 것이다, 언제 됩니까? 이제 12월이면 방학 때문에 여권 수요가 폭증할 텐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하는 방법을 개선한다든

가……

○이화영 위원 접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지금 현재는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동시에 스캔을 뜨고, 스캔 확인이 되어야 접수증을 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접수, 즉 현장에서는 직접 접수를 하고 추후에 스캔은 나중에 뜯다듣가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혼란이 국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거에 개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인원과 장비를 늘리는 계획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 안을 여기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원과 장비를 늘릴 것이며…… 제가 만약 행정자치부장관이라면 이 대행 발급 업무 중단시키겠어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장에 가보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새로 여권을 발급하면 깔끔한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정상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내 기술보다 훨씬 비싼 단가로 들어오는데 담당국장께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했을 때 기술상의 문제,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양해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판독은 시간이 걸리고 계속 에러가 나오고 도대체 뭐가 국산보다 낫다는 겁니까?

국산과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소모품 가격 같은 경우에 국산이면 1800원이면 가능한 게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3546원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소모품 비용만 16억 4000만 원이지요?

외교통상부가 기술이 좋은 것을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더 미뤘다가 깔끔하게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지 지금 이렇

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겨울방학 때 여권 수요가 폭증할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그 대책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저한테 별도로 서면보고할 필요 없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안심사소위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십시오. 안 그러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범 위원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제주평화연구원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마찬가지 의견임을 제시합니다.

이 문제는 외교부가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큰 예산을 쓴다 이런 각도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또 다른 각도에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관장하는 건교부나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0.66%에서 0.6%로 줄어드는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외무부에서 3년 동안에 걸쳐서 50억 씩 150억 원을 지원해야 되는 대통령 관심사항을 맡아온 것은 소관 부처의 업무분장으로 봐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돼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소관 부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건교부나 제주도 이런 데보다는 업무의 성격, 앞으로 제주도를 평화도시로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외교부에서……

○박성범 위원 아니지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특별법을 제정한 부서에서 이런 연구원이 필요하겠느냐 안 필요하겠느냐 하는 판단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그와 같은 성격을 규정하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해서 필요하면 그쪽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검토의 권한을 갖지 않은 외교부에서 무조건 예산만 따다가 거기다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 나중에 축조심의 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앞으로 핵 문제도 잘 끝나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계속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외교부가……

○박성범 위원 제주평화연구소하고 핵 문제하고 한반도 평화하고 무슨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다고……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것은 제주평화가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평화연구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박성범 위원 장관님, 보세요.

지금 외교부 예산은 중액이 돼야 되고 안보 예산 측면에서도 보강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쳐져서 가도 될 문제를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이 단계에서 연간 50억 씩 3년 동안 지원한다 이 것은 제가 보기로는 누구한테 설명을 해도 명분이 없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치파동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김치파동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이고 9월 말까지 한 790만t의 먹거리가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계속 문제 제기가 됐고 한데 이것이 물론 외교부가 관장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입하는 나라의 특명전권대사가 나가 있는 곳이 중국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할 때 이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30분을 현안보고 하는데 중국과, 국민과 직접 관계되는 먹거리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 공관의 인식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 틀림없이 통상마찰 부분으로 올 것이다’라고 했고 본부 감사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현지 공관에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현재의 인력이나 예산 가지고 안 되면 정부의 관계 부처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든지 요청을 하고 협조가 안 됐으면 그 기록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국정감사 시에 분명히 정부에다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공문 보낸 것 있으면 제출하고 또 혹은 우리나라의 관계 부처에서 주중대사관에 먹거리와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한 공문이 있으면 제시해라’, 한 건도 제출

이 안 됩니다. 없다는 겁니다.

외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리민복 아닙니까? 큰 틀에서 나라의 이익을 쟁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외교의 커다란 직무 중의 한 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게, 결국은 이런 문제 가지고 통상마찰 단계까지 들어가도록 정부가 방치를 했느냐, 외무장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 외교통상부도 국민의 건강 위생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이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중 관계가 한 1000 억 불에 달하는 통상관계까지 아주 신속히 빨리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부 문제들이 나온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의 통상마찰이라든가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 문제가 적당히 넘어가면 또 다시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먹거리를 들여와서 전 국민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문제는 안보 개념으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금방 먹고 죽는다면 문제는 또 달라요. 그것은 해결하면 되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인체에 유해하고 길게 봐서는 죽음에 이르는 이와 같은 독소적 요소를 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정부가 전혀 대책 없이 ‘먹거리는 외교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안보고를 30분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정부 차원이나 또 일부 여론 주도층에서는 대북관계다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국민들로 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관심거리가 들어오는 물건마다 유독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온 관심이 그렇게 쏠려 있는데 외교부나 공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치 마찰은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김치 마찰은 더 이상 비화돼서 한중 관계에 전반적으로 미치지 않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요.

○박성범 위원 장관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공관이 직무유기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번에 중국이 한국 김치에서도 기생충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쪽에서는 수출한 데가 없고 그 문제는 역시 중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아니에요. 김치를 제조하는 업소의 대부분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 김치를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기생충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조업자가 한국 사람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국산 김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수없이 그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에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본국 정부에 도움이라도 요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오늘날 문제가 이렇게까지 안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연결되는 이 문제를 참으로 안이하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

장관님, 이 문제는 김치분쟁이 뭐가 크게 되겠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중국이라는 이른바 우방을 대단히 나쁜 나라 같이 만들어 버린 것도 우리가 저지를 잘못이고 사전에 업자들이 가서 불량품을 싸구려로 만들어서 들여오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고 지도 못 한 것도 우리 정부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문제의 시작은 중국에 있다고 보지 않고 전부 우리 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로서는 수입식품 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한중 간에 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를 추진을 해서 이러한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범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깊고 넘어가겠는데요.

대미 정책홍보 예산, 외무부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국정홍보처가 지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안 올라갑니다. 정부에 대한 지지도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잘못돼 있는 것을 홍보로 뜯어고치겠다, 대미외교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 자

체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것을 12억씩 들여서 홍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부탁하고 한다 그래 가지고 대한 태도나 인식이 개선되느냐,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장관께서는 외교관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한 말씀 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이 문제가 일 반적으로 볼 때 좀 오해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미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 점을 홍보로써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진출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 또 다른 구라파 나라들도 이러한 홍보회사나 컨설팅 펌들을 대부분 대사관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도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끊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대사관에서 한두 개의 홍보회사들을 고용해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 관계가 아주 포괄적인 방향으로 많이 진전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좀더 다층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홍보 예산을 한 것이지 우리가 특별한 정부의 정권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범 위원 다 아실 테니까 길게 논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로비했지요? 박동선 씨 사건도 있고 그때그때 우리가 군사 원조가 더 필요하다든지 군수물자 수입에 우리 맘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사안별로 로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미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문안을 보면 한국에 대한 인식제고, 무슨 인식이 어떻게 잘못돼서 제고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기본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촉구, 그동안에 한미 간에 새롭게 외교관계 수립했습니까? 다 아는 것이고요.

결국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외교관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전문회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홍보나 여러 가지 로비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잘못된 대미외교의 방향이나 기조가 있었으면 그것을 고쳐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꼬인 이상 이렇게 12억 들여 가지고 대미 관계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대통령 말씀하고 따로 가시네요. 외교를 초과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초과달성해 놓고 이렇게 민간회사까지 동원해서 예산 들여 가지고 대미 홍보나 로비를 강화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외교 정책이나 방향이 잘못돼서 홍보회사를 고용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한미 간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나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외교관들이 정부나 언론이나 문화계, 학계 이런 데를 제한된 인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홍보기법을 가진 또 지식을 갖고 인맥을 갖고 있는 이러한 홍보회사를 전문적으로 고용해서 우리의 외교활동을 하는데 좀 부수적인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은 꼭 우리 정부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까지 우리가 예산의 절약이라든가 또 정권 차원에서 혹시 오해받을 일이 있나 이렇게 해서 그때 중단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더 성숙된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범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초과됐다고 해서 끊겠는데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균열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장관께서 제일 잘 아실 텐데 그 균열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해를 증진하고 하는 것이 과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국정홍보처가 그렇게 국정홍보를 강화하고 국영성 텔레비전을 3개씩, 4개씩 만들어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박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혁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바로잡을 일이 있어서요.

우선 이화영 위원님께서 방금 패스포트 발행 기간에 대해서 미국은 2주가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패스포트를 내면, 미국에는 익스프레스 패스포트가 있고 레귤러하게 패스포트를 신청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익스프레스는 아침에 신청하면 저녁에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레귤러도 한 2, 3일 그래서 빠르면 하루 정도 지나서 패스포트를 발행하는데 2주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패스포트 내기 위해 접수하러 왔다가 또 찾으러 오고 하는 것이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인력의 낭비다 해서 제가 경남도지사 할 때 미국식으로 하루 만에 내주는 것을 시행했어요. 우리가 빨리 내주니까 부산시, 대구시, 경상북도 전부 경상남도로 몰린 일이 있었다고요. 그 이후에 경남도민만 하루 만에 내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는데 패스포트는 가능하면 빨리 내주는 것이 좋아요.

미국 관계 다시 답변해 보세요.

○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재외국민 영사국장입니다.

미국이 2주 내지 3주 걸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긴급여권 발급제도는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 김혁규 위원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저희들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빨리 내주는 제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긴급한 필요에 따라서 여권을 빨리 발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혁규 위원 우리나라로 아주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령 기업하는 데 클레이임 걸려서 당장 내일 미국에 가야 된다든가 일본을 가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익스프레스 차지(express charge)를 좀 붙여서, 예를 들어서 5000원 받는 것을 익스프레스는 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성 있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그러한 제도를 저희들이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작용도 많이 우려돼 아직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김혁규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어요?

○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빨리 받고 적게 내는 사람은 늦게 받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 김혁규 위원 같은 비행기를 타도 일등석 앉는 사람하고 이코노미 앉는 사람하고 불평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혁규 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달 30일 고이즈미 3차 내각이 발표되었는데 보수내각이다, 아시아를 무시하는 무시내각이다, 일본의 네오콘들이 전부 입각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번 개각이 6자회담과 북·일 수교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물론 일본의 새로운 내각에 우익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많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도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일본 국익에 바람직하다는 우리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일 협상은 일본과 북한 간에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일본 간에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일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의 새로운 내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주시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혁규 위원 이번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국민의 반대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이 일본 방문을 결정했던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록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우리 국민의 정서상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과 북핵문제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한일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만한 대일관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외교관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용외교 측면에서도 장관님의 이번 일본 방문은 잘한 일인데 일본 방문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특히 고이즈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것으로 답변이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방일 중에 고이즈미 총리, 마치무라 대신 기타 여러 정계 인사들을 많이 만났고 또 언론계와 학계 인사들도 만나서 한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질서 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해서 이것이 결집돌이 된다는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 유감을 제일 강한 톤으로 설명을 했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이 계속 설명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전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심이다 이런 점을 계속 설명했고,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좀더 홀륭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저한테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체 주도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 일본 정계나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한 점을 계속 강조해 나가고 일본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혁규 위원 고이즈미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보도를 보았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고이즈미 총리한테도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여론들을 주의 깊게 살펴 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이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혁규 위원 여하튼 전범이 없는 새로운 신사가 설립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한류 지속·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해 가지고 2억 61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한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좋은 반응을 이루면서 아시아지역 또 일본 이런 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외교부에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인기가수나 연예인들이나 문화

인들을 몇몇 나라에 파견해서 한류 확산에 좀더 촉매적인 역할을 하는 효과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김혁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류문화사업은 역시 문화관광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외교통상부는 이 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바쁜 일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한류사업의 확대 지속은 민간 차원에서 행해져야만 상대국 정부 또 상대국 국민의 감정 유발을 예방할 수 있지 정부에서 개입하면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상대 정부나 국민들에게 오히려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해 가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혁규 위원 그다음에 국제협력단 청사가 신축되면 몇 명이나 근무하게 됩니까? 협력단의 근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현재 250명입니다.

○김혁규 위원 그런데 250명 근무할 청사를 이렇게…… 평당 600만 원을 치더라도 1만 평이고 평당 500만 원을 치더라도 1만 2000평인데 청사가 이렇게 커야 됩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그것은 협력단 직원의 사무실만 짓는 게 아니고 저희가 초청한 개도국들의 연수생 숙소도 함께 짓습니다.

○김혁규 위원 숙소에 들어갈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숙소는 현재 객실 200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1년 동안 늘 거기에……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그럼요. 그 외에 해외에 파견하는 봉사단 요원들의 훈련을 위한 숙소로도 활용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숙소시설이 적어서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객실이 200개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2500명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김혁규 위원 2500명이 한꺼번에 묵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그런데 3년 후에 저희의 원조규모가 2배로 증액될 것을 대비해 본다면 현재의 설계도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김혁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사장, 이사장, 감사들 방을 보면 아방궁이에요. 대만 같은 데는 국장 방에다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사람 한둘이 겨우 앉을 작은 스페이스인데 대체적으로 차관 방도 그렇고 장관 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헤드 멤버들의 사무실 면적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제가 때때로 느낍니다.

그와 관련해 2000년부터 5년 동안 외국에서 와서 숙소를 사용한 사람 숫자, 근무 인원 그리고 설계서에 산출된 내용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알겠습니다.

○**김혁규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크지 않나, 1만 2000평이라는 것은 대단한 평수거든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1만 5000평에 다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받은 1만 5000평 대지에다가 2000평 규모의 철재식 건물을 4층으로 짓는 것입니다.

○**김혁규 위원** 그러면 8000평이네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그렇지요.

○**김혁규 위원** 그러면 평당 건축비를 얼마로 잡고 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공사가액은 2년 전에 마친 설계도로 계산한 것이 한 600억 되는데 실제 공사가액은 조달청을 통한 시공자 선정이 돼 봐야 구체적인 공사가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혁규 위원** 그래도 설계를 할 때 대강 그 가액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알겠습니다.

○**김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중입니다만 의결정족수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9분)

○**위원장 임채정**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처의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선임은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소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박성범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신계륜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였다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이와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예산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위원장 임채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炳國 委員** 반기문 장관님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장관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대미 홍보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전문적인 홍보회사와 12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안 되어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계획이다 이런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崔炳國 委員**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崔炳國 委員** 저는 물론 이렇게 해 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근래 정부에서는 사회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행시키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관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맞는 단체니, 흥위병단론이니 하면서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외교활동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데 이 업무조차도 다른 단체에 맡겨 가지고 한다는 것, 그게 과연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거 로비스트를 고용한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국 회사에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KOICA라든지 다른 단체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것이 우리가 어떤 외교정책을 대행시키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崔炳國 委員** 홍보업무도 외교업무의 하나이니까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외교업무인데 우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정확한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를 미국 내에 확산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崔炳國 委員** 그리고 EU에서 대북인권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안 했다고 대답하셨는데 오는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 보름도 안 남았는데 정부에서 기본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거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권도 해 왔고 불참도 해 왔는데, 지난 9월 16일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위기—도전과 기회’라는 세미나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계속 침묵하면 독일 나치의 유태인 홀로코스트와 같은 참극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미국에 출장 가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보면 미국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유엔 인권위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불참, 기권해 온 것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말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라든지 외국의 인권단체는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특수 관계라는 한마디 말로 늘 기권이라든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이 답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 그런 답밖에 안 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점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崔炳國 委員** 정정당당한 우리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崔炳國 委員**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입국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평소에는 되어 있지 않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북한의 탈북자들을 돋기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런데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별도의……

○**崔炳國 委員** 그래서 외교활동비와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崔炳國 委員** 금년 9월 현재 외교활동비에서 한 12억 원을 썼고 작년에는 14억 6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편법으로 할 게 아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금이라든지 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지원금 자체는 외교부보다 통일부……

○**崔炳國 委員** 그런데 해마다 외교활동비, 예비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중에 따져 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탈북자들을 송환해 오는 여비라든지 또 그분들이……

○**崔炳國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崔炳國 委員**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금년에는 363억 9800만 원인데 물론 대사관 개축이라든지 대사관을 짓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의결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차입금으로 운용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셈이 됐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런데 이 차입금은 10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바를 것 같습니다. 물론 한몫에 하면 액수가 엄청나게 커지기는 합니다마는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시켜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자상환액이 금년도에는 55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는 42억 6000만 원인데 집행한 것은 21억이고 20여억 원은 다른 데에 전용했고, 2003년도에도 17억을 집행하고 14억은 전용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23억만 집행하고 22억을 전용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2억 중에서 14억 54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다른 데에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자 관계라든지, 이자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정한 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 이상을 전용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지요. 적정하게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인건비 확보를 위해 이·전용하는 것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원 외에 별도정원을 사용해 가지고…… 예산안에서는 82명으로 하고 있는데 151명을 현원으로 인정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이·전용이라고 해서 말썽도 많은데 이번 예산부터는 현실화시키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崔炳國 委員 이거 반영하지 않고 전년 대비 6.4% 증가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崔炳國 委員 다음 정상회의 참가 예산입니다. 107억 4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중에 특수활동비 16억 8000만 원, 이게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마는 사실상 외교통상부 예산이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

○崔炳國 委員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 13억 3400만 원, 경호실 3억 3600만 원 이런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외교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외교부에서 쓰는 것, 청와대에서 쓰는 것 다……

○崔炳國 委員 물론 정상회의할 때 한꺼번에 이래 한다고 하지만 경호실과 비서실은 별도의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외교부 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안 맞지요. 이것은 그쪽으로 넘겨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뜻뜻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려 이쪽 예산으로 숨겨 놨다가 저쪽에서 사용하고…… 이런 건 안 될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다음 국제교류재단, 작년에 해외사무소 두 곳

을 한다고 해 놓고 베트남 러시아 독일 해서 세 곳을 더 증설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예.

○崔炳國 委員 이런 것은 별것 아니다 싶지만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소위 국회의 동의도 없고 예산 편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崔炳國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최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위원 장영달 위원입니다.

지금 최병국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내년도 세출예산 항목 내역을 보니까 통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럴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외교활동비에 199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대일 예방외교에 또 1억 6700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항목들은 외교활동비하고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로는 왜 이것을 외교활동비에 포함 안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분리를 하려면 제3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별도로 책정됐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개요설명 6쪽 계속사업 11항목에 한일여성친선협회가 있고 12항에 한일친선협회가 있어요. 한일여성친선협회에 16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한일친선협회에 1600만 원을 포함해서 같이 집행하든지 하지 꼭 구분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한미여성친선협회 생기고 한러여성친선협회 생기고 앞으로 다 생겨서 1600만 원씩 넣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통합을 하든지, 구역을 명확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1600만 원 해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18항도 한미동맹 강화 1억 65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또 외교활동비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아무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짚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다음에 IMF 때 해외공관이 몇 개 폐쇄됐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22개 폐쇄……

○장영달 위원 22개 폐쇄됐는데 사업가들도 우선 투자를 할 때는 당장에 돈이 남지 않더라도 투자를 하잖아요? 이 공관들을 폐쇄해 가지고 도대체가, 나는 대단한 손실을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 노력을 하면 통상 문호를 확장해서 외교관들의 노력에 따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얼마든지 더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유엔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지지를 호소할 때도 얼마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IMF 때 어려워서 이것을 폐쇄했다 하더라도 지금 웬만큼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으면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과감하게 반영해서 원상회복을 해야지 외국 공관들을 없애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외교역량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국제사회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미약하게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더라도, 오늘 보니까 존경하는 박성범 위원이 예산심사소위원장이 됐는데 국회에서라도 협의해서 이것은 되살려 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를 해야 나중에 무슨 소득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장영달 위원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는데 북한 당국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도 촉구를 해야 되고. 다만 남북화해협력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남북화해협력정책이라고 하는 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인권의 문제다 이것 아니겠어요? 북한에서 죄짓고 도망 나온 사람의 인권까지 생각하다가 나중에 남북 화해협력의 틀이 깨지면 전쟁으로 치닫고 그것만큼 인권이 근원적으로 차단되는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대응을 하되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축이 훈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지엽적인 문제 건드리다가 큰 기둥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음에 제가 수시로 유엔 국제분담금 얘기를 하는데 정규분담금은 우리가 체납한 게 없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화유지군……

○장영달 위원 PKO 그 부분이 체납돼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 부분을 정규분담금에 많이 썼습니다.

○장영달 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듣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체납하기로 들면 미국이 제일 많이 체납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분담액이 커서 그럴 거예요.

국장님 나오시지요.

이럴 때는 시간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죄송합니다.

미국은 과거에는 체납을 많이 했었는데 요즈음은 거의 다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미국은 분담금을 가지고 유엔의 장악력을 높이고 당기고 할 때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 7월에 유엔에 가서 들은 얘기 중에서—공개적으로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우리도 내라는 대로 그냥 줄줄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줬으면 좋겠는 것이 PKO 활동 중에서 평화유지군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사이프리스 사령관으로 계실 때 제가 국방위원장은 하면서 한 번 가 봤어요. 거기가 분단이 돼 있고 터키 세력하고 그리스 세력이 맞서 있더라고요. 예컨대 수도 서울처럼 됐는데 도시 한가운데를 갈라서 평화유지군들이 지키고 있더만요. 거기에 보니까 영국군들 호주군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의 평화유지군은 서로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월급도 유엔에서 나오고 또 국제적으로 위상도 높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엔에서도 우리한테 분담금 미납액 지불을 요청하고 할 테니까, 그런 곳에 평화유지군

을 우리도 좀 많이 보내야 돼요. 군대라는 것은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약간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출정하기도 해야 군대이지 만날 안전지대에 편안하자고 앉아 있으면 무슨 놈의 군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평화유지군들은 과감하게 세계적으로 파견해야 된다, 유엔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납된 부분들을 납부할 경우 때로는 우리 한국군대가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에 적어도 한 200명은 가야 된다 이런 요청을 하면서 납부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국익을 취하면서 유엔 분담금을 체납했다는 비난도 피하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사실 지금 PKO에 우리나라가 41명 정도를 보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PKO 활동 참여가 너무나 미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PKO 참여 요청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내적인 사정도 있고, 국회 비준과 통과 과정 등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PKO는 가급적 많이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경비도 유엔에서 우리한테 전부 다 부담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최근 몇 번 세미나도 했었습니다마는 상시로 평화유지군을 훈련시켜서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우리가 파병을 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놓고 필요한 경우에 항상 그때그때 아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영달 위원 장관께서도 국제적인 관례들을 수집해서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제가 작년에 영국의회 국방위원장을하고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해 보니까 영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은 분단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군사적인 수요가 특별한 계별로 없어요. 그러나 보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PKO를 파견해서 자국의 이익도 확보할 뿐만 아

니라 또 국제적인 경험도 쌓고 PKO를 파견함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큰소리도 치고 돈도 벌고 통상 면적도 넓혀가고, 아주 종합적인 이익을 위해서 PKO 군대를 계획적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영국 호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너무 낮고 소홀한 것 같아서 PKO, 평화유지군 파견 이런 문제는 우리 군은 훈련됐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연계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진타오의 평양 방문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우리 민족 간의 동질성 회복을 해 나감에 있어서 중국이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질의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리고 통상 분쟁 문제도 지금 외교통상부에 법률가들이 계시는데 이 복잡다기화 된 상황에서 해외 법률에 능통한 법률가들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통상 분쟁,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인력이 과연 충분하냐 이런 지적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6자회담을 앞두고 후진타오의 평양 방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유엔 북한 차석대사인 한성렬 발언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서 성과 있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감사합니다.

○장영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장영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지만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현안으로 되는 지적이 좀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질의할까 생각합니다.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현안으로 등장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난 다음에 한일 간의 국민적 감정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정부 간의 심각한 대립 충돌 양상

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일본을 방일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전쟁 중에도 양국 간에는 협상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협상 창구의 담당자가 가서 회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가셔서 나름대로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어떤 성과물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난번에 제가 일본 방문을 함으로써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 문제에 대해서 정부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학계, 정계,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임팩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을 방문한 사실 자체도 일본에서 상당히 큰 뉴스와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도 아주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성권 위원** 어쨌든 장관님이 직접 방문한 사실 자체, 충돌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사실 자체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라든지는 상당하게, 외교에 있어서 한국의 질적인 성숙한 면들 그리고 야스쿠니신사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 얼마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얻어낸 성과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본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고이즈미 총리 자신의 개인적인 애고 같은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좀 어느 한계를 느낀다는 이런 점을 토로하는 점도 제가 느꼈습니다.

○**이성권 위원** 고이즈미 수상의 개인적인 캐릭터, 정치적인 소신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3기 내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명된 사람을 보면 아소 다로 외상이라든지 아베 신조 관방장관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일본 내에서의, 한국식 표현을 하자면 네오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스스로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이번 내각이 구성됐는데 이런 내각과의 협상이라는 게 성과물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어제 아소 다로 신임

외무대신이 저한테 인사차 전화를 걸어와서 한 20여 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제 자신은 일본의 내각 구성에 대해서 성격이나 이런 것을 규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새로 된 각료들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한일 관계 또 동북아 미래에 바람직스럽다 이런 점을 분명히 다시 짚었고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가 주시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성권 위원** 아소 다로 외상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제가 여기서……

○**이성권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역사 인식 문제라든가 자기의 여러 가지 과거 발언과 입장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서는……

○**이성권 위원** 여기서는 지금 전 국민들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라든지 한일 간에 충돌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본과의 단순한 외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역사의 문제, 민족의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통화한 내용들 자체를 그렇게 공개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그쪽의 여러 가지 입장이, 그러니까 발표를 하더라도 일본 측에서 발표하는 것이 대개 외교 관례이고, 그러나 양 외교장관 간에는 서로 자세한 내용은 발표를 안 하고 통화를 했다는 내용 정도로만 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제 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내용상에 있어서 특이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 관례상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외교 관례상도 그렇고 앞으로 일본과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공개적으로 해 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외교 관례상……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적인 관례까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전 마치무라 외상이 APEC 때 한일 간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마치무라 전 대신뿐만 아니고 고이즈미 총리도 노무현 대통령과 APEC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분명히 저한테 전달했고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APEC의 주최국이고 노 대통령께서는 APEC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 또 대통령의 일정,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려 주겠다,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으로서 확정된 것은 없네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외교통상부에서 나온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한은 정상회담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뉘앙스가 나왔고, 그리고 현안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예를 들면 일본 쪽 의원들 같은 경우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의원과 참배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 분리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뉘앙스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에 따른다면 APEC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정상회담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예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과 관련되어 있고, 또 APEC이라는 것은 양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다자간의 정상회담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다자간의 정상회담인데 양국 간에 현안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 간에 회담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양자 간 회담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조건이라는 것보다 하여튼 야스쿠니신사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한일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위원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시기 때문에 질문이 참 어렵습니다. 정부 차원으로 어쨌든 야스쿠니 참배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 분리 대응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분리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때그때 상황을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섰으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측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르는 시나리오나 카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만 밝혀 놓아봤자 아무런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인지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구체적인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러한 외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지금 여기서 딱 왼벽하게 해 놓기가 어렵습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의원들 중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명단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궁금한 것�이 제가 지난 10월 19일에 공식적으로 외교부에 그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4일간 일본에 학회 발표도 있고 해서 잘 때 제가 친한 의원들이나 나름대로 만나야 될 의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명단을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의 답변 내용은 명단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웠었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기본적으로 전체 명단은 일본 내에서 대외비로 처리하고 있는 명단이고, 그다음에 지난 9·11 중의원선거 이전의 명단은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11 이후에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고 낙선되었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명단을 입수한 것도 사실은 꼭 그렇게 정상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얻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위원님 꼭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9·11 이후가 아니고 그것이 없다면 그 이전의 명단이라도 달라고 했었고, 잘 아시다시피 일본 의회 내에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모임도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회원들도 나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외교통상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또 요청한 측면도 있는데 전혀 없다고 답변한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성권 위원 아니, 그 전에 제가 외교통상부에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외교통상부에서 왔던 답변이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아마 대외적으로 누출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성권 위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 제출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개별적으로 명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그 외에 중국과의 김치 전쟁 부분과 관련된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고 그 외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정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위원 정의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보기애 최근 우리 주변 외교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정부가 외교 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국내 정치적 여건도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의 반일정서라든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라든지 또 이번에 쌀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로 하여금 외교정책을 이행해 나가는 데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외활동이 굉장히 더 활발해지고 일을 할 것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상황도 보면 일본에 새로운 내각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 표현대로 한다면 한 일 간에 긴장감이 좀 돌고 있다고 할까요, 또 중국하고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 같습니다만 최근에 식품교역과 관련한 긴장감이 있고 또 정부 쪽에서는 한미 동맹관계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도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책정한 것이 145조, 금년도 예산 대비 8.4%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는 지금 여러 가지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 환율 변경이라든지 APEC 사업의 종료라든지 또 국제기구 분담금 일부를 해당 부처로 이관했다든지 그런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예산이 9000억 원에서 8700억 원으로 3.1%가 오히려 감소됐다, 특히 인건비는 6%가 올랐지만 사업비는 5.5%가 감소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긍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국제기구 분담금이 상당 부분을 해당 부처에 이관하고도 한 6% 이상이 증가됐다든지 ODA도 한 16% 가까이 증가를 했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만 국제기구 분담금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못 내고 있던 돈을 완전히 갚는 것이 아니고 2009년 내지 2010년에 가서야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고 ODA도 올려봤자 GNI 대비 0.08%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또 이것도 쓰나미 복

구지원비 한 200억 원 이상 빼고 나면 사실 실질 증가는 얼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보니까 사업비 중에서 외교활동비 이게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각 공관이라든지 외교부에서 외교활동에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 외교활동비는 무려 21.2%나 감소가 됐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외교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짜고 점점 어려워지는 외교 환경 속에서 어떻게 외교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교활동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교부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못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APEC이라든지 몇 가지 주요한 사업이 종료돼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외교활동비 20% 줄인 것은 정부 전체적으로 외교활동비를 줄이겠다는 기획예산처의 방침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과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21%를 자른 것 같습니다.

ODA 같은 것은 올해 16% 증가했는데 2009년 까지 GNI 대비 0.1%를 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부 내에서는 확정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2007년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이것을 0.1%를 더 올리든지 이러한 내용을 지금 현재 예산 당국이나 재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다 해서 협의를 죽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본이 내각 구성이라든지 점차적으로 우경화·보수화하는 경향에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외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중국 김치 문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반적인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고 검역 관계도 고위 검역체제를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정부 내에서 외교부의 입지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하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예산안은 8.4%가 증가됐는데 외교는 지금 여전히 그렇게 나빠지고 해야 할 일이 그렇게 산적해 있는데 오히려 3.1%가 감소했다면 사실은 11% 정도가 내려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 예산의 비중에서 볼 때도 2003년 이후에 그나마 0.66%를 죽 유지하던 것이 내년에는 0.60%로 0.06%가 더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참여정부에 외교정책의 비전 같은 게 과연 있는 정부인지 의심할 정도로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는 대미 홍보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억 원 그나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안 돼 있습니다.

○정의용 위원 나중에 외교부에서 증액이 됐으면 하는 돈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의용 위원 유엔 등 국제기구 활동비도 10억 내지 20억쯤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정의용 위원 일본 내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조사 및 봉환사업도 최소한 3억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정의용 위원 그다음에 외교부가 내년부터 외교망 확충하겠다, 내년도 8개 공관을 다시 개설하거나 신설하겠다 이렇게 의욕적인 안을 내셨는데 굉장히 저는 잘 짠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관 하나 운영하는데 최소한도 연간 평균 150만 불이 드는데 내년도 8개 하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안 돼 있습니다.

○정의용 위원 KOICA 신청사 건립 600억 중에서 100억도 계상이 안 돼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정의용 위원 이것 다 합치면 엄청난 돈이 더

필요한데 그러한 돈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도 안시키고 국회에 가져오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안을 국회에다 내고 심사를 받겠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짠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외교부가 예산안을 짤 때 정부 내에서 외교활동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좀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돈들이 반영이 돼야지 다른 부처는 전부 평균 8.8% 이상 증액이 됐는데 외교부 예산은 3%가 오히려 감소돼 가지고 온다면 도대체 참여정부가 외교를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지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나올 걸로 보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정의용 위원 정부 입장은 아직도 좀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정의용 위원 그동안 정부가 취한 입장으로 볼 때 또 현재 6자회담이 거의 막바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고 또 남북 간 협력사업이 다방면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안에 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기권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권을 하더라도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 정부의 우려 이런 것은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인권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북측 당국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는 점을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 위원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

겠습니다.

다른 부처에도 그런 느낌을 갖는데 새해 예산을 짤 때는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지난 연도에 대한 각종 사업과 기관운영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평가가 전제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신계륜 위원 사업비의 책정을 증액하고 감액 할 때는 일정한 평가가 될 텐데 이 평가를 각 부서가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장관님 주재로 평가회 같은 것을 한 경험이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부서별로도 하고 장·차관 주재로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교부의 평가가 끝나면 기획예산처의 전문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제출됩니다.

○신계륜 위원 그런데 평가라는 게 부서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데 성과가 얼마 나왔다, 이것이 목표치에 미달한다든가 하는 평가의 틀 같은 게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대개는 성과를 분석합니다. 정부의 어떤 업무든지 간에 성과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의 계속성 여부를 결정하고 또 증액이나 적정한 예산액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계륜 위원 전체 외교부의 평가회 같은 것은 없지요? 장관이 주재해서 평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자주는 안 하지만 대개 기획관리실장이나 차관보, 차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러면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평가회의를 했던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검토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신계륜 위원 설명서나 세목들을 자세히 봐도 이것만으로는 도대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면 업무를 파악하고 예산내역을 상세히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외교활동비를 지적하면서 많다, 적다 또 다양하다고 하시는데 외교활동비라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좀 적어졌는데 이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비용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산의 내용에 따라서는 완전히 공개하기도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율평가를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신계륜 위원** 외교활동비 분야는 국회에서 상세히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 내에서 무슨…… 이거 외교부 예산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외교부 예산입니다.

○**신계륜 위원** 그러면 외교부장관께서 별도로 검증하고 사용을 좀더 철저히 하는 제도는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 외교부 자체에서도 하지만 국정감사도 있고 또 감사원의 감사 이런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국회에서 전 내용을, 자료를 상세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안 보는 만큼 집행부처에서 철저히 감사하고 올바로 쓰였는지를 점검하는 제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여쭈어 보는 것인데 APEC회의 때 북한 인사를 초청한 적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정식으로 초청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러한 희망을 전달한 적은 있고 우리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계륜 위원** 구두로 전달한 것도 일종의 초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초청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20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과정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기에 대해 어떤 관심을 표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러면 APEC회의에도 북한인사가 옵서버든 어떤 자격으로든 안 올 가능성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올 가능성성이 없는 거죠.

○**신계륜 위원** 그다음에 유엔 관련 활동은 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유엔 관련 활동은 유엔대표부를 중심으로 합니다만 본부의 외교정책 실과 국제기구정책관실에서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하는 활동과 유엔대표부에서 하는 활동에 차이가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본부에서는 유엔활동에 대한 기본정책 같은 것을 수립하고 또 필요한 경우 직접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신계륜 위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데 예산을 좀 넓혀서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라온 돈은 있는데 편성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까 정의용 위원님도 질책성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외교부 나름대로 많은 활동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신청합니다마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갔다 오신 국장님의 문화외교국장님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신계륜 위원** 잠깐 나와 보실래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출장 가 있어서 심의관이……

○**신계륜 위원** 그러시면 그냥 놔두시고요.

대충 보도를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 대표단이 파리회의에 가서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표결을 했고, 표결 이후에 기자회견이라든가 기타 성명을 발표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신계륜 위원**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최성입니다.

현안 질의에서 예산 질의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중 간에 김치분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한중 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하자는 입장을 천명할 때 사실은 조금 성급하신 것

아닌가, 좀더 결과를 보고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국내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되면서 만약에 그때 감정적인 대응으로 갔더라면 우리 정부의 입지가 참 힘들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후 중국과의 김치분쟁 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앙금, 무역마찰의 가능성들이 상존해 있는데 국내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나온 상황에서 향후 김치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기본적으로 더 이상 양국 국민들 간에 감정문제라든지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선은 검역절차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검역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바로 가동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한중 간의 검역문제는 김치 문제만이 아니라 쌀 협상 비준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중 간의 부가합의 중에서 사과 배 등의 검역절차 역시 신속한 진행을 중국 측이 요구하고 있고 일정한 합의가 돼 있는데, 이번 김치분쟁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검증·검역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중국산 파일의 수입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유해 가능성과 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예정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쌀 협상하면서 사과 배를 부가합의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을 낮춘다든가 면제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검역당국인 식약청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저는 참여정부가 외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장관님께서 전반적으로 평화외교 또 실리외교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미외교에 있어서는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당당한 외교를 전개하시는 데에 비해서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너무 저자세이고 무대책이고 일관성이 부재하지 않느냐는 기우가 듭니다.

특히 이번 외교부장관님의 방일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참여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극우·망언 정권이 다시 내각에 포진했고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번 장관님의 방일과 참여정부의 대일외교, 저자세·무대책 외교라는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저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저자세 외교를 했다고 전혀 생각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강경한 대응책을 구사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간 것에 대해서, 가기 전에는 비판이 좀 있은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갔다 온 결과는 갔다 오기를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무슨 내용 때문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첫째는 일본 국민뿐만이 아니고 정계 지도자들에게도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아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외교부장관의 과거 어떤 방일 때보다도 일본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제가 갔기 때문에 주는 메시지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외교부장관님도 그렇고 참여정부에서도 새로운 추도시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오시자마자 233명이 참여한 초당파 일본 국회의원 모임에서 제3의 추도시설과 관련해 예산 운운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하는 주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추도시설 주장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먼저 우리가 예산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정 간섭이라든가 하는 주장은 부당한 주장이고요, 제가 그런 점을 일본의 아사이신문과 특별회견을 하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일본 측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도시설 약속은 일본 측이 두 번에 걸쳐서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성 위원 제3의 추도시설을 대안으로 설정하고 정책으로 접근한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아시아의 평화외교·선린외교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본 외상은 야스쿠니참배 정당하다 또 A급 전범은 점령군의 결정일 뿐 일본하고는 무관하다고 했고, 또 실제 일본 외상의 부친이 조선인 징용자를 끌고 간 탄광의 소유주였고 외상까지도 실제 탄광의 사장을 지낸 경력이 있고, 또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외할아버지는 1급 전범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팩트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맞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이러한 보복 경제제재와 북한 붕괴론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극단적으로 저해되는 전범의 후예이고 실제 극우·망언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이즈미 내각이 이후의 6자회담, 한일 선린외교, 동북아 평화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북한 핵문제라든지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그런 측면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나름대로 일본이 보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일본, 한국 모두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아마 그런 전제에서 오늘 북일 수교협상이 열릴 텐데 장관님께서는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 문제는 낙관하기도 어렵고 비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주 오랫동안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이 다시 속개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상황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자민당 신현법 기초위원회의 원안에 보면 일본해 운운하고 천황을 국민 통합의 상징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 언론이나 일본 내에서는 향후 헌법개정안에 독도 문제를 새로운 영토 분쟁의 씨앗을 담는 형태로 이번 기초위원회 안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우려가 전에도 보도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자민당이 자기들 당론이라고 한 데에는 그러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그 부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제기한 내용 중 YTN 위성방송망을 통한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망 구축사업 관련해서 북미지역 재외동포들에게 고국 소식을 알려준다거나 한류 열풍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면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때문에 힘들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축소되거나 재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국에 대한 열정과 한국에 대한 소식들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상 비중을 더 둬서 향후 중국, 러시아, CIS지역에 대한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말씀하신 대로 YTN이라든가 한국어뉴스가 전 세계의 우리 동포들한테 가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동포들이 한국어뉴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통외통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강재섭 원내대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는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을 연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전농에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민단체가 함께 비준 전 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3자 협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의 합의처리 그리고 이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고를 막는데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에 좀더 유연한 수용 가능성은 없습니까? 장관님께서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후에 총리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와 논의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와 관련해 우선 주무부처인 농림부 이런 데에서는 이미 유사한 협의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좀 유보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 대표가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저도 정확히 내용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쌀 협상 비준동의안과 유엔에서 토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연계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쌀 협상은 나름대로 우리가 10년 관세화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협안과 관련 없이 국제적인 의무사항으로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마지막으로 서면질의 두 가지 요청 하겠습니다.

하나는 국제협력단의 해외지원사업에 있어서 2003년과 2004년에 약 50%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투명한 수의계약이나 투명한 계약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고 또 이런 전후 재건 시 정경 유착의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서면 답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동북아역사재단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예산상 지원요청을 하셨는데 고구려연구재단의 경우처럼 이 동북아역사 연구의 필요성 또 재단을 통해서 일본 문제와 중국 문제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있지만 과연 장관급 이사장이 필요한지,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은 고구려연구재단의 재판이 될 확률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 하지만 지나치게 조급하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 좀더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예산소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현 위원 김치파동, 탈북자 문제…… 하여튼 대중국 외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중국산 김치파동이 한중 무역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김치파동을 뛰어넘어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등 다른 부분으로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베트남 방문 중이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사과를 받아 내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더 곤혹스러운 건 중국산 김치의 경우 생산·유통·배분 모든 과정이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 국내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나와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약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언론에 노출하기 전에 중국산 김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외교부에 알려 주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통상교섭조정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통상교섭조정관 김중근 저희가 식약청하고는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중국에서 불만이 나왔던 것은 중국이 몇 가지 질문 자료를 제출했는데 식약청으로부터 답변이 좀 지연되고 그리고 답변 내용도 중국이 원하는 것에 충실히 답변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조금 저희한테 대한 불만이 쌓였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저희가 사전통보를 하기는 했는데 사전통보를 하고 언론에 발표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현 위원 식약청 측에서 외교부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얘기하고 저희가 중국한테 미리 이런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중국과 우리의 논의과정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통상교섭조정관 김중근 그것은 그 당시에 외교부는 거기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하고 저희 식약청, 두 부서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정문현 위원 하여튼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다고는 하나, 다른 정부 부처나 기업 업체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데 외교부는 종체적인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처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치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나서 주기를 바라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통상 문제나 이런 것으로 넘어가지 않고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통상교섭조정관 김중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관님도 보고를 드리셨습니다마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역 문제가 전부터 오래 계속 돼서 2003년 10월에 저희 외교부장관하고 중국의 질검총국장하

고—이것이 장관급으로 모든 검역이나 검사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중국 기관입니다—양국 간의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차관보급 이상의 협의체를 만들기로 MOU를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죽 협의를 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거의 내용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합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1차 회의를 금년 중에 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문현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국과 벌어지는 다음 문제가 탈북자 문제인데 27일 중국 칭다오 이화한국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 13명이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 우리 손에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 중이라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이것이 9월 28일 연대시 국제학교에 들어갔던 탈북자들이 북으로 끌려간 지 꼭 한 달 만인네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것이 북·중 민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발효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장관께서는 그때 답변이 ‘접경지역의 국가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 체결을 위해서 이것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이 의정서가 인권 침해 문제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이 의정서의 효력이 2006년 내년에 끝나는 것을 앞두고 보편적인 민·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범죄인 인도조약만 체결되면 국제적 비난 없이도 탈북자는 다 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조성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관 이외의 모든 탈북자 루트가 막힐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가 꼭 중·북 민형사사법공조조약하고 관련이 돼 있는지 그 규정 자체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를 그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문현 위원 본 위원이 칭다오 국제학교 관계자들한테 문의해 본 결과 ‘왜 이번에 우리 영사관이 들어오기 전에 공안이 먼저 들어와서 그렇게 되게 됐느냐?’ 이것을 물어봤더니 지난 10월 11일 탈북자 8명이 진입했을 때 우리 공관한테

먼저 알렸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굉장히 엄청난 압력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서 공안한테 먼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내년도 탈북자 예산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당초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국내송환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29억을 따로 편성하기로 했다가 내부 논의과정에서 신규사업 편성에 반영되지 못하고 외교부 활동비 안에 숨기는 이런 방식으로 편성됐는데, 예산은 정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중국한테도 그렇고 너무,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현실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각별히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문현 위원 하여튼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나 북한 인민들한테도 북한 당국이 잘못해서 벼려질 수밖에 없던 인민들을 남한 정부가 보살피고 있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고 이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손에 안 넘어오고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꼭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통외통위가 국제교류재단법을 개정해서 국제교류기금에서 재외동포재단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는데 이 당시에 통일외교통상위는 외교부에 대해서 우리 외교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확보 방안 등 혁신 방안을 정기국회 때까지 마련해서 보고하고 주문을 했고, 그것이 일시방편적인 편법이었다는 것도 외교부가 인정을 하고 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기국회 중인데 아무것도 넘어오는 게 없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통외통위에서 결정된 내용

에 따라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문현 위원 그래서 일단 9월까지 넘겨주시기로 한 부분 중에 외교통상부가 국제교류협력증진기금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법과 관련 법 총 3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단됐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장 김성환 지난번에 통외통위에서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그 법안의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동안에 공청회도 했고, 초안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통외통위에서 전체적으로 종합된 입장을 정리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안을 정리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문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의 최선책은 국제교류기금도 좀 늘려서 한 5000억 정도 갖고, 외교부 입장은 청이 필요없다 그러는데 저는 재외동포재단이 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무슨 방법이 나와서 양쪽 재단이, 목적사업이 다른 재단이 기금을 갖다 쓰는 편법적인 현상을 정상적인 형태로 돌려놔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재외동포재단 재원이 여전히 이중으로 외교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에서 각각 지원되고 있는데, 재외동포재단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지금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목적사업이 다른 재단으로부터 활동비 내지는 운영비를 받아 써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십니까?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운영비는 출연금에서 받고 사업비는 교류기금에서 받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인 견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 수입원이 확보돼서 장래에 대한 특별한 우려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현 위원 어떻게든 정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몇몇 위원님들의 의견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법안을 만들어 놓고 빌의도 안 하고 제출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넘어오면 심의하고 이것이 이대로 가야 되는지, 고쳐져야 되는지, 이 법안이 문제가 있는지를 가리는 곳은 국회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상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정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 위원 유선호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3.1% 감액된 예산이 반영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유선호 위원 그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외교통상부의 비중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그동안 누차 강조해 온 바대로 외교 경쟁의 강화가 필요한 국제화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걱정이 되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력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유선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체납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의 여러 가지 권한 행사가 제한될 우려도 있고 또 유엔 외교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우 미흡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외교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김치 파동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한중국대사가 한덕수 부총리를 찾아서 항의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정부 대응이, 중국의 부당한 압력으로 사실은 그렇게 언론에 비쳐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매우 미숙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의 자유화 확산과 더불어 지역주의 추세도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진 통상국가로서의 위상도 확보해야 되고 또 국익도 극대화해야 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 놓고 보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응이 있었다, 오늘 보도에 보면 국산김치 제조공장의 3.2%에 문제가 있었고 10% 정도의 확률이지만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만시지탄이지만 그

당시에 차관보급의 MOU까지 진행된 마당에서 중국에서 그러한 항의가 왔을 때는 인체에 안전한 기준을 상호 간에 설정해서 빨리 합의하고 또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김치를 만들어 수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양국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외교적으로 검사 또는 검역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신속하게 합의하고 또 중국의 항의를 일응 일리 있는 것으로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응했어야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명같습니다마는 통상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의 볼륨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또 우리 검역당국의 인적인 한계라든지 또 외교 공관에서의 계도의 한계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개선을 해 나가고 또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미숙하게 대응했다든가 이런 점이 큰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봐서도 크게 미숙하게 대응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자연적으로 터져 베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외교적으로 비화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선호 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것만큼은 전혀 하자가 없다는 확신하에서 지금까지 대응을 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사안이 아니고 순전히 행정적인, 절차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부서로서 외교통상부나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유선호 위원 저도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상황이 발생한 마당에서는 외교통상부가 통합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유선호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위상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또 김치라는 품목이 외에 영향을 더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잘 알겠습니다.

○유선호 위원 제5차 6자회담에 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이 강경하고 북한은 좀 유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강경하다든지 북한이 유연하다는 이런 분위기는 지금은 아닙니다.

○유선호 위원 최근 보도를 보면 10월 21일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개입한 혐의를 들어서 8개 북한 회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 사실이 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문제는 핵 문제 과정과 별도의 조치입니다.

○유선호 위원 하여간 그것 외에도 미국은 일관되게 5차 회담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현황을 자진신고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북한은 어쨌든 간에 경수로 폐연료봉을 제3국으로 이송해서 처리할 수 있다, 참가의지를 밝히는 등 그런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이나 무기를 자진신고하라고 압박한다 이런 것은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북한은 이미 9월 19일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서, 합의사항에 따라서 모든 핵무기, 핵 프로그램, 시설을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고 이런 것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꼭 미국이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강요한다든가 압박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아니다,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수년간 협상을 하면서 참 수백 번도 더 이것을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폐기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대 말, 또 행동 대 행동 이런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유선호 위원 그러면 원칙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어요.

아까 모두에 제안설명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

습니다. 이번 5차 6자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협상의 모멘텀도 유지하면서 어떤 이행계획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형상 나온 것은 지금 선 핵폐기를 미국은 주장하고 또 북한은 선 경수로 제공을 주장했던 것이 4차 회담 이후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양쪽의 접합되지 않는 요구를 협상의 모멘텀으로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고민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유선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렇게 양국이 그런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써 동결 대 보상 이런 것을 한번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유연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동결 대 보상이라는 것은 이미 94년 제네바 합의 때 해서 그것이 실패를 한 것이기 때문에 9·19성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폐기 대 상응하는 조치, 폐기 대 보상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것은 현재 이 합의서에서는 상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즉시 폐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유선호 위원 그렇다면 동결이라는 단계를 축소하고 바로 폐기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유선호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장관께서 판단하시기에 동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에너지 지원을 할 만한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때 여러 가지 중간 단계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데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결이라는 중간 단계를 택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우리나라를 외교라고 하면 4강 외교가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 나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대일 외교와 대중 외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일본 외교와 대중국 외교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일 외교는 최근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또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지금 거의 꽉 막혀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 한일 정상회담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이번에 방일 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방문 후에 일본에서 우익성 인사로 내각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감지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고이즈미 총리를 만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고이즈미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 전망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저는 한일 간의 관계가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또 가장 가까운 이웃, 우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색 관계가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색 관계가 지금 현재 정치 외교적인 측면이 일부 있지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반면에 경제나 문화나 인적 교류, 기타 다른 교류는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지난 3월부터도 이러한 방향으로 큰 영향은 받지 않고 나갔던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래가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인식이나 이런 것이 좀더 고착화될 가능성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정치 부분과 다른 사

회·문화 부분을 분리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일본 관계나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가 기본적으로는 자주 외교라는 참여정부의 기본 원칙하에서 지금 상당히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면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나, 단기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본과 중국 외교에 단기사건 대응 외교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자주외교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본하고는 어떤 외교를 펴겠다든지 또는 중국하고는 어떤 외교를 펴겠다든지 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단기 대응전략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외교 관계에서 일본에서 어떤 사건이 난다거나 또 중국에서 김치 사건이 난다거나 이런 사건이 나면 거기에 대응하는, 끌려 다니는 방향으로 좀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외교문서 공개를 했을 때 사할린 한인 문제나 또는 종군위안부나 원폭 피해자 문제가 한일협정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외교적으로 일본에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팔로우 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로우 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특별히 사할린 한인 문제는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했을 때도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문제이고, 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총리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해서 국제 사회에 문제로 대두해서 한국이 이끌고 나가는, 적극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외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 물론 내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한다고는 보지만 이것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 동북공정 사태가 있었을 때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 지역을 중

국 당시의 변방이라고 지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자기네들이 입증하는 과정을 국고를 지원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 북부와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아직은 잠재적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고증을 입증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중 경제 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이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 간에 이루어졌고, 그렇게 됨으로써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고증을 한쪽에서 하면서 돈을 들고 들어가서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아마 시나리오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비공식적인 보도에 의하면 2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원조 제공을 약속했다는 소식마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북·중 관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이번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한민족의 통합을 통한 21세기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로서는 중국에 대한 북한 경제 의존 현상은 새로운 외교적 도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의 인프라와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의 지배가 현실화될 경우에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정말 북한이 아닌 중국과 한반도 개발을 상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생존을 건 전략적인 과제다, 그래서 남북 경제협력의 속도나 범위를 우리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전략을 세워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중장기적인 시나리오, 또는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 약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정말 좋은 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프라가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올 가능성성이 있다는 지적도 우리 정부 것 예의 주시해 가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경추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북한에서 아직 많이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여러 가

지 지하자원과 우리의 경제협력 이런 것으로 서로 교류한다든지 이런 점을 상당히 깊이 연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북한의 수용태도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있기 때문에 북한 자원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의존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명숙 위원 개발 독점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하여튼 잘 주시해 가면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대중관계·대일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것인지를, 특별히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우리가 대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저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의 교육문화위원회로 했다가 그것이 당정협의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외동포재단으로 수정발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재외동포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재외동포 정책의 기로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외동포청도 결국 따지고 보면 중국의 눈치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외교적 마찰이,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외교통상부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외동포재단의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정문현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편법입니다. 이 부분을 원상복귀시켜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재외동포 단체지원금도 6억 원이 줄었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예산이 50억 원인데 이것은 소관 부처가 외교부나 행자부인데 이것을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

상복귀시켜서 해소할 경우에 재외동포단체 지원 예산의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000개 이상 재외동포단체에 평균 900불 가량을 나누어 주는 소액지원 방식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해외에 있는 단체 1000개에다가 90만 원씩 다 나누어주면 이것은 오히려 자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란·반목을 가져오는 역효과를 놓고 그것 뭐 한 90만 원 100만 원 받으려고 그냥 이러고 있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이러한 예산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낸다면, 이게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렇게 백화점식의 소액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재외동포 정책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택해서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서 효율적인 지원방식의 발전 방향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900불씩 나누어주던 게 50억 불이 있다 그러면 아주·구주·중동·아프리카 이렇게 지역을 좀 나누어 가지고 올해는 아주 지역이면 아주 지역의 중요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받으십시오. 이번에 경주도 폐기물도 그렇게 성공했듯이 좀 인센티브를 주면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아주 지역에 좋은 프로젝트를 한다, 특히 사할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극동 지역의 에너지 지원협력이 전략적 국익사업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할린 한인 지역에 전략적인 거점 확보를 위해서 그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실효성이 있으면서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 방법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지원사업이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외교부가 이것을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동포재단으로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과 책임을 동포재단으로 이관을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교부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외교부마저 재단으로 동포사업 이관을 주저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외동포사업 일원화를 어떻게 하게 될지, 관용을 좀 보이셔서 외교부가 재단에게 이러한 사업 이런 행사를 넘길 필요가 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소액지원 방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참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아주 자생 능력이 있는 단체들에는 우리가 몇백 불 지원해도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도움을 아예 끊어 버리면 거기서 또 다시 인화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생겨서 공관이나 공직자들이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투서도 한다든지 별의별 것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게 중앙화라든지 경제 능력이 잘 안 되는 이런 데서는 그러한 소액의 지원도 상당히 큰 효과를 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만 많으면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수십 년간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동포들의 무한정한 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끊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동포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자생적으로 자활하면서 아주 명예로운 시민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별도로 대화를 해 가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다 효율성을 높여서 하되, 행정부에서 할 때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좀 혁신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런 것을 좀……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해외를 많이 여행을 하시면서 동포사회 지도자들하고 접촉하는 이런 계기에 어떤 경우에 보면 그분들한테 상당한 기대감과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것이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을 어렵게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거주국에 가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서울만 들여다보면서 계

속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정부에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완전히 먹여 살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포 정책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것은 물론 기본 상식입니다. 동포 정책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과 문화 부분에서는 지원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정** 웬만하면 정리해 주세요.

○**한명숙 위원** 이것 한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안과 재외동포청과 관련해서 외교통상부와 당정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외교부에서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도 의지를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50년 이상 해 온 경험에 바탕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바탕에서 정책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650만의 동포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는 데 우리가 완전히 책임을 지는 정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것은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이해를 잘못하는 겁니다.

교육·문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한글학교와 문화를, 중복된 것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한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를 다 먹여 살리는 정책으로 갈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외교통상부에서 ‘재외동포 재단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좀 획기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하고 ‘안을 내겠다’ 해서 제가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그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재단에다 역량강화 방안을 만들라 해 가지고 예산 조금 보탠 것, 인력 조금 보탠 것을 저한테 던져 주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오늘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한중 간의 김치마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듣고 저는 참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과도한 표현일는지 모르겠지만 무사안일주의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 김치마찰 맞습니까? 통상마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통상마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통상마찰이 아니면 김치마찰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것은 김치마찰로서 지역과 관련된, 위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권영길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건강한 삶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이게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정부와 외교부는 관계가 없다,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외교부는 아무 문제없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외교부가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문제를 삼으시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과 외교를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아니……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과도하게 갖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중단하세요! 중단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말장난 하자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말장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 위원 김치마찰이지 어떻게 김치마찰이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저는 외교마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듣자듣자 하니까……

아까 장관께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우리 외교부는 뭘 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중국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고 있다, 앞으로 문제가 확대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기억납니다.

○권영길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확전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뭘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 외교부가 책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덮어둬야 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닙니다. 덮어두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권영길 위원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덮어두자는 겁니까? 아까 통상실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외교부에 참으로 문제가 많다, 염중한 문제를 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통상실무자께서는 중국 측에서 우리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식약청 답변이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셨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통상교섭조정관 김종근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제대로 답변도 안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 기관의 잘못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국민적 감정으로 폭발되면 한중 간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권영길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

던 것인데요, 아까 통상실무자께서는 양국 간 식품안전 및 검역기준에 관한 협의가 됐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됐다고 했습니까? 협의 중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통상교섭조정관 김중근

2003년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의체 설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2003년……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협의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통상교섭조정관 김중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합의는 안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통상교섭조정관 김중근 마무리 단계입니다.

○권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한미 통상네트워크는 구성이 됐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 이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합의된 통상네트워크 같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큰 소리를 치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국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저도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좀 저기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13억인데, 사실 우리 외교의 인력과 조직에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아까 정의용 위원님께서도 외교부를 많이 질타하셨습니다마는 바깥에 일은 무한정 벌여져 있는데 내부적으로 뒷받침을 못 받고 결과적으로 저희도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핵문제라든지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색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갖지만 신경을 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별통상교섭인데 올해 예산이 33.3%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특별통상교섭 활동지원비가 500

만 원 맞습니까? 5000만 원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5000만 원입니다.

○권영길 위원 어쨌든 33.3%는 감액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통상교섭조정관 김중근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통상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특별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핵 회담이 잘 풀려야 한반도 평화체제도 구축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외교기획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북핵외교기획단은 조직돼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권영길 위원 원래 외교부에서는 24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기획단 정원은 총 24명인데 현원 10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행자부에서 반대해서 3명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북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북핵외교기획단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정의용 위원께서도 외교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강조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4명이 필요한데 3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부분 인원과 예산이 대폭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6자회담에서도 앞으로 별도 포럼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북핵회담이 타결되더라도 동북아 안보체제로 나아가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맡을 특별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북핵기획단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결과론적으로 보면 외교부가 소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요로에 설명도 하고 최대한도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는 정원은 3명만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7명도 다른 부서의 직원들을 빼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조직을 갖고 하는 나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특별대책을 여러 부처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고구려연구재단과의 갈등관계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잘 조정되어서 현재 고구려연구재단을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전부 흡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외교부 산하기관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독립된 민간기구로 되어야 됩니다. 만일 외교부 산하기관이 되면 앞으로 중국이나 다른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면 외교부와 직접적인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민간기구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절차는 명정하고 현명하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언론이나 국민의 반응은 다소 감정적이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많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것을 짜증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국회는 정치하는 곳이거든요. 국민의 궁금증, 불만 이런 것을 표현하고 해소할 대책이 있는가를 촉구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국민하고 정부하고 대화하는 자리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성실하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예산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감액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3.1% 감액이 되고 전체 비중도 0.66에서 0.6으로 줄었다, 그런데 다른 부처도 전년에 비해서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체 예산은 8.4%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국방비 같은 것도 거의 십일곱 몇 %가 늘었더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절대적으로 보면 감소가 됐습니다.

○신기남 위원 다른 부처는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다른 부처를 일일이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신기남 위원 대개는 느는데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마 대개는 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기남 위원 외교비용이 더 투자될 계획은 없습니까?

(임채정 위원장, 임종석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사실 외교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데가 많습니다. 특히 개발 협력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많이 부족한 것 이 사실입니다.

○신기남 위원 해야 되잖아요? 계획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2009년까지 0.1%로 올리려고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기남 위원 제가 문화관광 위원을 8년 했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김영삼 정부 때의 문화예산이 0.5%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순수문화예산을 1%로 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고 하니까 1%가 넘었습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아까 1%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나라 외교관 비율이 공무원 중 세계 최하위라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러면 외교로 먹고 살겠다는 나 라인데 늘려야지요. 또 여기 보니까 고문관도 있네요. 옛날에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드는데 이런 것 다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관도 97년도 이후에 22개가 없어졌는데 앞으로 3년간 22개를 다시 만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네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신기남 위원 공교롭게도 22개 없어졌다 22개 만든다…… 그런데 옛날에 없어졌던 것을 그대로 만드는 것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옛날에 없어졌던 22개를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2개가 없어짐으로써 외교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최소 3년 내에, 우리는 바로라도 22개를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3년 내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신기남 위원 강력하게 예산투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쪼그라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결국 그거를 통해서 나라의 국부를 창출하고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관도 늘리고 공관도 늘리고 해서 적극적인 외교통상정책을 평야 되는데…… 다른 것 세세한 것 얘기할 것 없이 그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모조리 나서서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그거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구체적 정책이야 유능하신 외교관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저는 국제교류재단을 주목하는데요.

이사장님, 지금 교류기금이 얼마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2600억 정도……

○신기남 위원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곰곰이 보니까 실제 활동비는 별것 없어요. 국제교류협력 120억, 해외 한국학진흥 140억, 모조리 합쳐서 260억이고 그 외에는 별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좀 적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제교류사업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빈약한 것 같은데 이거 충분합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한 20%,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데 260억 가지고…… 특히 문화교류는 굉장히 중요한데 54억입니다. 여기 한국의 대표적 공연전시물의 해외소개 이것은 몇 건이나, 얼마씩 지원이 되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보통 신청을

하면…… 우리가 1년에 두 번에 걸쳐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신기남 위원 몇 건이며 또 지원을 하면 소액 위주이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예.

○신기남 위원 조금 조금씩 마지못해서 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세계 경제권 10위라는 대한민국이 문화교류가 되겠나, 생색만 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류사업 예산이 국제교류재단 말고 외교통상부나 문화관광부 또는 다른 곳에 설치된 게 있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에도 조금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이왕 국제교류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려면 차원이 다른 어떤 구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현상유지로 2000억인가 가지고, 이자 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대폭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사업을 재단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안목이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사실 금년에 와서 해외 사무소 다섯 군데를 개설했고 또 국내에 문화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류재단의 사업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대폭 확대가 됐고 예산만 하더라도 교류재단의 순수예산이 18.7% 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신기남 위원 항상 전년도보다 뭐 어떻다 그러는데, 요새 사병 월급이 3만 몇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됐는데 3만 몇천 원 오른 것을 가지고 80% 오르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액수로는 3만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몇 % 이런 것 말고, 아니 260억 가지고 국제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를 수출하는데 1000만 원 단위로 줍니까, 100만 원 단위로 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유명 관광관에 한국실 설치 같은 것도 기업에 의존해서 하는 것 같고 유일하게 삼성에서 여기저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좀 세우셔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대단하게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몇십 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촉적을 좀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신 위원님께

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교류재단으로서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현재 시스템 갖고 전년도 몇 %다, 뭐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뭐 좀 하나 내줘 보세요. 그런 구상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신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위원** 장관님, 질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오는 17일에서 23일 정도에 표결 예정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홍준표 위원** 이번에도 기권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진행 중에 있구만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홍준표 위원** 어제 통일부장관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 서독 같은 경우 베를린장벽이 쳐지자마자 잘츠기터라는 곳에 중앙범죄기록소를 설립해서 동독의 인권상황을 30년간 체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홍준표 위원** 잘츠기터 보고서라는 거. 그리고 통일되고 난 뒤에도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를 4만 2000건 정도 조사해서 지금도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독이 근 30년 동안 그 기구 하나 가지고 동독의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 감독하는 바람에 동독의 인권침해 상황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거 할 때 동독에서 내정 간섭이라고 아무리 항의해도 서독은 굽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봐서 북한인권 상황 같은 경우도…… 만약 이번까지도 기권을 하면 그야말로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장관님은 외교적 측면에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꼭 참석해서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그리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홍준표 위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해야 될 시점에 EU의 다

른 나라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제기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탈북자 입국 관련 예산을 보면, 다른 분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외교활동비와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거 정상적인 것 아니지요? 탈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차라리 통일부에서 충분히 예산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활동비나 예비비에서 빼가 버리면 다른 외교활동하는 데 얼마나 지장이 많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외교부에서 쓰고 있는 외교활동비가 결과적으로 탈북자들을 일시 수용·보호하고 본국까지 송환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숫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이 바로 소진이 돼서 예비비를 자꾸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정상화시켜야 될 테고요. 예산을 통일부로 통합하는 것은 처리하는 데 있어서 행정상 어려움이 좀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 위원** 그렇다면 외교부 예산에서 정상적인 항목을 갖추어야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맞습니다.

○**홍준표 위원** 정상적인 항목을 갖춰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일반 외교활동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홍준표 위원** 일반 외교활동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일반 항목으로 넣어서 하고 외교활동비로 하는 예는 없어야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리고 재외동포재단, 오늘은 이사장이 안 나왔네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그렇습니다.

○**홍준표 위원** 전번에 내용도 모르고 나왔다가 혼 한번 나더니만 안 나왔네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이사장님이 지금 해외출장 중입니다.

○**홍준표 위원** 지금 나오신 분은 이사입니까?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기획이사로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지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그렇습니다.

○**홍준표 위원** 열린우리당 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기본적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상실하는 사람만 규정하고 있어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예, 그 사람들 을 중심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이탈하는 사람도 규제하고 있어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그렇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안은 뭡니까? 그 내용 모르지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홍준표 위원 재외동포들이 지금 열린우리당 안에 대해 왜 반대성명을 내고 왜 투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홍준표 위원 반대성명 낸 것은 알지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그렇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면 왜 반대성명을 냈습니까?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국내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는.....

○홍준표 위원 보세요. 규제하는 것이 많아서 국내 활동을 제한한다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고서 무슨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기관장이 내용을 모르잖아. 왜 반대를 해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저는 그런 내용 을 재외동포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 도 포함되어 있는.....

○홍준표 위원 며칠 전에 미주 한인회 총회에서 반대성명서가 나왔잖아요? 열린우리당 안을 어떤 내용으로 반대한다, 반대성명서 나왔잖아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그렇습니다.

○홍준표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그게 그 내용입니다.

○홍준표 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규제를 한다는 게 아니고 재외동포들을 전부 병역기피자로 범죄인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무슨..... 재외동포재단을 운영하면서 재외동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안 내용도 모르고 또 지난번에 한번 혼나고도 지

금도 법안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업무를 하는데 가장 중점적인 업무가 뭐예요, 재외동포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재외동포 업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법률이 계류 중인데 법률 내용도 모르고.....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병역을 기피하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하는 내용이 결국 국내 활동을 규제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말고, 그것은 국내 활동 규제로 안 해요. 출국심사장에서 잘라버리는데, 국내 들어오기 전에 잘라버리는 건데.....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국내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지요.

○홍준표 위원 유승준이 어느 법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출입국관리.....

○홍준표 위원 그런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이것으로 하면 유승준을 규제할 수 있습니까, 여당안대로 하면?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홍준표 위원 모르잖아.....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그렇지만 출입국 관리규정이 지금 유효하기 때문에 유승준 케이스는 그대로.....

○홍준표 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지금 사안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왜 동포들이 반대를 하고 반대성명서를 내고, 미주 총연에서 다 나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여당에서 제출한 국적이탈 또는 상실 이 안이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법무부에서 나왔다가 법사위 소위 토의 결과 법무부에서 철회한 안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 내용 모르지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그것 제가 들었습니다.

○홍준표 위원 법사위에서 법무부가 철회한 안을 지금 그대로 제출해 놓고 있어요. 재외동포들을 전부 병역기피자로 범죄인시 한다 그에 가지고 여야를 통틀어서 다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법사소위에서 철회한 안을 그대로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외동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예산을 따고 업무집행을 하려면 업무를 숙지해야지, 지금 가장 핵심 쟁점이 돼 있고, 내가 아까 1시 30분에 재외동포 세미나에 갔다 왔어요. 프레스센터에서 재외동포, 기자들 전부 모인 테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지금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성명서 내고, 난리예요. 그런데도…… 법무부장관이야 다른 일에 바쁘니까, 재외동포를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오늘 예산 심의하는 데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최소한 재외동포 정책을 하려면 이 법안의 뭐가 문제가 되고, 자문을 해줄 때도 그렇습니다. 당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가서, 왜 법무부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에서 질타를 받은 안을 여당안이라고 내게 합니까? 좀더 다듬든지, 안 그러면 그때 질타 받은 내용을 수정이라도 하든지…… 이 법안 자문해준 일 있습니까?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저희 재단에는 직접적인 의견 개진 기회가 없었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일이에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이 알아서 파악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재외동포 의견들이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 조언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그런 것을 예산 받고 하는 일 아닙니까?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것 곧 법사위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오늘 돌아가서라도 재외동포 의견을 취합해 보고 법안의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놓으셔야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에서 나 몰라 하고 앉아 있으면서…… 법안이 뭐가 계류 중이고 어떤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국회에 와서 지금 돈 달라고 해요? 잘못됐지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홍준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 김부겸 위원입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김치 분쟁과 관련하여 한중의 당국자 간에는 조금 차분해 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상당히 냉기류가 돌고 있

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당사자 간에는 이것을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현지에 있는 주중 대사도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지난달 26일 중국 측이 우리 측에 ‘중국에 수입된 한국산 제품에도 문제가 있지만 중국은 대외 발표에 치중하지 않는다’라는 우회적인 경고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문제가 여전히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특히 통상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우리 언론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헐적으로 표본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데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중국산 김치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최근에는 일부 언론에서 사실상 중국산 김치의 대부분이 한국인 수입업자들이 연관된 문제라는 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침뱉을 만큼 스스로 얼굴에 침도 뱉고 그러면서도 1년에 약 1000억 불 가까운 교역을 하는 중국과 통상 마찰을 스스로 초래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말이지요. 장관님 보시기에 이 문제, 아까 양당국 간에는 그래도 냉정하게 이 문제를 풀자는 입장까지 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어떤 협조가 있어야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례적으로 장관인 제가 두 번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것이 외교 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중국 정부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로 되고 기타 식약청에서도 하고 또 우리 관련 부서의 국장들도 좀더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외교적인 것이라든지 감정적인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감정싸움 같은 모양으로 비치지 않도록 좀더 냉정하게 검역당국 간에 또 외교당국 간에 행정적인 것은 행정적인 절차대로 차분하게 처리해 나가면서, 너무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서로 상대측의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시작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확대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것이 잘못하면 통상 마찰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요, 아마 장관님께서 그때그때 대응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떻게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포착하세요.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면 사건의 진행 이후에 지금 국민의 불신은 불신대로 커졌고 양국 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통상 이익은 우리 스스로가 손해를 자초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상당히 어리석은 태도를 취한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양국 장관은 중국이 한국으로 활어를 수출할 때 반드시 중국 당국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것만, 의무화하도록 약정을 맺은 적이 있지요, 한중활어위생약정이라는 것을 맺은 적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김부겸 위원 장관급 레벨에서 확인 안 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까 통상교섭조정관이 보고를 드린 것은 2003년에 양국 외교부장관 간에 검역체계에 대해서 고위급 협의체를 갖자 이런 데 대해서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 뒤로 더 구체적인 협의서 같은 게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해수부장관이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기로 이제 양국 정부가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교역 관련의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공동조사를 해서 서로가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시인하고 고쳐 나가고 하는 이런 정도의 성숙한 관계가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의 케이스라기보다도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의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열리기는 열리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다음 주에 틀림없이 열립니다. 제가 지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

는 아마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일 북경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4시에 발표됐을 겁니다.

○김부겸 위원 우리 측은 이번의 5차 6자회담에서는 이행계획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자고 그러면서 각국의 반응을 타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쪽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일괄 합의를 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각국을 만날 것 같고 미국 등은 단계별로 그때그때 로드맵을 짜자라는 정도에 그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장관도 다녀오시고 송 대사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도의 입장 차이가 확인됐으며 또 이번 5차 6자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다섯 나라 간에 아주 빈번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행계획서를 협의하기 위한 데 초점을 둬서 협의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후에 이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이 됐든지 또 어떤 다른 부분적인 이행 합의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9·19 공동선언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북측이나 또는 우리 측이나 전부다 제출해서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마 9일에 개최되는데 APEC 정상 회의가 그다음 주에 바로 또 개최되기 때문에 긴 회담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에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어떻습니까, 여전히 북미 간에는 신경전이 날카롭게 벌어지고 아직까지 양국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진전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군요. 이번 북경에서 북미 간에 사전 접촉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받으신 것이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사실은 힐 차관보의 방북 문제 같은 것도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현되지 않았고 북경에서 회담이 속개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미북 간에 접촉

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지난번에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혹시 이번 6자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의 납치자 문제 등에 있어서 좀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간 일본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부겸 위원 아니, 제 말은 납치 문제를 가지고 일본 내에 여러 가지 방북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 문제를 완화해서 당신들이 6자회담에서 조금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신 게 있나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북 협상이 오늘부터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그때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북 협상을 통해서 납북자 문제를 포함하여 일북 간의 제반 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일본이 신경을 더 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부겸 위원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고이즈미 수상이 북일 수교를 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일본이 예전의 회담과는 달리 이번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일부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저도 일본에 대해서 일북 협상을 조기에 잘 진전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라든지 북핵 문제 해결 또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우니까 이런 데 좀더 조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부겸 위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강온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엔 아마 양국의 셔틀 정상외교를 금년에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APEC에 초청한 손님으로서 오는 고이즈미 수상을 위한 양국 정상회담조차도 고려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점에 대해서는 12월에 예정된 셔틀 정상외교에 대해서는 상황이

아주 염중하다 이런 점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APEC에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장국이고 또 주최국인 위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 대통령의 일정이나 제반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해서 확실한 입장은 표명을 안 했습니다.

○김부겸 위원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언제 까지나 일본은 제 갈 길을 가고 중국이나 한국은 계속 강력한 비난성명이나 하고 국민 여론이나 악화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1년에 교류하는 인구 수가 양쪽에 500만 가까운 이런 현실에서는 정말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국민감정은 국민감정대로 있더라도 외교당국, 특별히 국가원수급 외교에는 저는 어느 정도간의 인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룰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항상 이런 문제만 나오면 냄비처럼 끓었다가 또 식고 나면 또다시 하고 하는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지난번 장관께서 그 어려운 때도 일본을 방문해서 할 말씀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특히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외교를 함께 있어서 국민의 감정의 잣대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록도 한센인 판결 관련이나,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자이툰 파병 연장 관련, 부산 APEC 준비 관련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나머지 재외동포재단이나 KOICA 등에 대한 질의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말씀하신 취지를 잘 유념해서 처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웅 위원 바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토로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우토로 문제는 주민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

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사인 간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미숙한 전후 처리 문제 관련된 사항이고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절박한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토로 주민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일본이 시정해야 할 문제로서 유엔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 외무성은 이 문제가 민사상의 토지소유권의 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 소유자 주민 간 해결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판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월 9일 다음주에 일본 내 토지 소유자간의 소유권 소송에 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사실 지금도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수시설도 없는 철저히 일본에서 방치된 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대로 그냥 놔두면 마치 우토로에는 토지를 불법 점거한 재일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만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역사적 본질과 거리가 먼 부분에서 우토로 문제가 어둠에 묻힐 우려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 주고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민간 차원의 모금 이런 것으로 지원하고 또 재일 동포들이 강제퇴거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인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소유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이 종료되고 소유주가 주민들과의 협상을 통한 토지 매입 이런 것이 결정되면 재외동포재단이라든지 외교통상부 이렇게 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 같은 것도 신청해서 지원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종석 간사, 임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웅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치 마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간단하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마찰을 보면서 2000년에 있었던 마늘 분쟁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만약에 이것을 정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또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또 잘못된 발표

는 확실히 중국 정부에 지적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에 입각해서 분명한 대응을 하는 태도를 견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질의,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에 관련한 질의나 대유엔 외교 강화 관련된 내용, 또 일본 내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조사 및 봉환사업의 주요 사업 신규 편성에 대한 지원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위원 임종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예산 질의하기 전에요, 지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몇 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정부가 기권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장관님, 헬싱키 협정과 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임종석 위원 헬싱키 협정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대응했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방이 동유럽의 체제를 인정하는 대신에 동유럽의 국내 인권을 개선하라는 국제 사회의 대응이었지요. 그래서 양 진영이 안보나 경제협력과 함께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 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동유럽의 영토나 체제 인정을 대가로 동유럽의 인권 향상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지적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데서 국제 사회가 이 헬싱키 협정을 통해서 풀어갔던 사례를 우리가 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만큼 걱정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한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의 식량 문제나 북한으로부터 이탈한 주민들에 대한 보호,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보호

하기 위해서 당연히, 마땅히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나가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유엔에 현재 우리와 동시 가입해 있는 국제 사회의 한 국가인 만큼 마땅한 대우와 함께 합리적으로, 그리고 외교적 관례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워야 합니다. 미국의 커트 웰든 의원이라고 혹시 장관님 잘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잘 압니다.

○임종석 위원 미 하원 군사위 부위원장은 지금도 하고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석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펜실베니아 공화당 출신이고 미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요, 이분이 내놓은 한반도 평화구상을 마찬가지입니다. 헬싱키 협정과 비슷한 절차와 정신에 따라서 이분이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미국과 북한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핵사찰을 하고, 북한이 NPT에 재가입하고, 그리고 포괄적인 경제개발과 안보 구상에 대해 협의하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 정부를 공식 인정하고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하는 것이 웰든 의원이 제기하는 한반도 평화구상의 1단계입니다. 이 구상이 완료되고 나면 불가침조약을 영구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서명하고, 그리고 북한이 헬싱키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여하면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간표를 제시한다, 이후에도 평화체제와 북미 간 관계 정상화 이런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국 공화당 출신의 하원 군사위 부위원장의 이런 안들도 바로 그러한 국제적 관례와 앞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던 기준들을 갖고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북한과 현재 임박해 있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우선 전심전력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만 국제 여론화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통제하에 개혁 개방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평화체제를 통해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 북일 관계 정상화, 북미 관계 정상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시점에 이런 문제를 국제여론화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갈 것이냐, 이것은 장관님께서 잘 정부 내에서 검토하셔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국제 사회가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다른 관례를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면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은 오히려 현재 당면한 북핵 문제 해결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포단체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내 재외동포 단체들이 정치적 신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좀 지원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LA를 중심으로 미주한인연합이 있고, 뉴욕에 한인유권자센터, 그리고 워싱턴에 시민연맹 등의 단체들이 우리 유권자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사회에서 보면 유권자운동과 비슷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그쪽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또는 행정가들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국회에 여야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뉴욕의 한인유권자센터를 방문하고 이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솔직히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에…… 작년 말 기준으로 이분들이 만 명 이상의 유권자명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취합한 것이냐 하면 8년 정도를 매주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선거에 참여하자고 호소하면서 유권자명부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한인유권자후원회를 할 때는 주지사나 상하원 의원들이 다 참석할 정도로 과거에 그냥 유력한 정치인들 후원회에 테이블 한두 개 사서 후원금 내고 밥 먹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질적으로 발전해 있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LA와 워싱턴의 조직을 보지 못했습

니다마는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포들 중에도 지금 주 상하원이나 시 의원입니다마는 7명이 현재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계는 빼더라도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본국 정부가 관심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분들이 외교관 못지 않은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직접 선거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보다는 덜 느끼겠습니다마는 예컨대 지역구를 가진 제 입장에서 제 지역에 한 1000명 정도 사람이 모여서 저에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저의 정책 여부에 따라서 자신들의 표를 결정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 명 이상의 명부를 모으고 후원회를 하니까 주지사고 상하원 의원이고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실태를 파악하셔서, 저는 가급적 내년 예산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몇만 불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조사도 하시고 당장 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주류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참정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 같은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유권자 등록을 권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약간씩의 경비 같은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종석 위원 저희들도 예산안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같이 논의해 볼 테니까 정부에서도 우선 내년에 그쪽의 전체사업은 아니더라도, 특히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재정이 들어갈 텐데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그동안 고생해 온 것 같더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임종석 위원 저도 가서 제 있는 돈 다 털어주

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우선 핵심사업이라도 꼭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임종석 위원 제가 할 게 많았습니다마는……

○위원장 임채정 하나만 더 하세요.

○임종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란의, 언론에는 보복성 금수조치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2차관이 이란을 방문해서 외교부장관, 차관도 만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답변은 공식적으로는 ‘어떤 통상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주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상 우리 수출업자들의 PI는 접수가 됐는데 이제까지 승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 십여 일 지났습니다마는……

○임종석 위원 실제는 금수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실제로 그러한 인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란 측에도 아주 강하게 양국 관계 발전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현지에서도 계속 대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종석 위원 이번에 이규형 차관이 방문하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이란 측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저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혹시 IAEA 이사회에서의 우리의 투표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 또 우리가 처한 입장에 대한 설명을 아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뭐가 연관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임종석 위원 이란이 중동에서는 우리 최대의

수출시장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임종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수조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쪽 외교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확인해 줄 수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외교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불투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위원 이 문제는 좀 서둘러서 해결을 하셔서 우리 기업들 불편이 없도록 꼭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일본도 IAEA 표결에 우리랑 똑같이 했지만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아중동 외교가 소홀한 데 따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보면 역시 아중동 외교는 다 뒷전으로 밀려 있는데 작년, 올해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고 상임위를 하면서 특히 자원외교의 중요성과 합해서 아중동 외교의 중요성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전혀 개선될 것 같은 느낌은 없거든요?

장관님, 차관도 한 명 들고 했으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GCC 국가들에 대해서도 꼭 좀, 장관님이 못 가시면 차관님이라도 가셔서 사전 관계를 원만하게 갖고 있으면 이럴 때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 정부도 아중동 지역 외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중동 지역을 다녀온 바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께서도 이번 달에 GCC 주요한 몇 나라를 공식 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종석 위원 제가 나머지 한·아세안 통상네트워크 기반강화 문제나 한류 예산, 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외교 분야의 유사·중복 사업들에 대한 정리 문제하고 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요.

외교부 전체 예산이 축소, 환율 등을 감안하면 실질 예산은 축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전체 정부 예산의 8.4%가 확대된 상황에서 외교부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걸 보고 좀 힘도 빠지고 입도 아프고 그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교관들이 다들 신사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교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통외통위에서 그만큼 소리 질렀으면 됐지, 그러면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총리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외교에 관심도 갖고 계시고 장관님에 대한 신뢰도 두터운데……

안 되면 통외통위원장하고 기획예산처장관님하고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협박도 좀 하고 다들 각급에 맞게 만나고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이 축소돼 버리면 통외통위 여야 위원들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임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임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외통위원장이 협박에는 별로 소질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저도 궁금한데 이란의 한국에 대한 조치 이게 지금 한국만이 그런 조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비슷한 조치를 받고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네 나라가 그런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이 EU의 의장국이다 그래서, EU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나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나머지 두 나라가 어디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르헨티나하고 체크 공화국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아르헨티나 체크는 그렇다손 치고……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두 나라의 경우에는 IAEA 결의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다른 양자관계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체크에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같은 게 허용이 된 데 대한 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양자 간의 관계를 들어서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실제로는 영국하고 우리가 주 타깃이 됐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겠네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한 태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국제적인 정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은 이란하고 상당히 교역량이 많은 이런 점도 하나이고요.

○위원장 임채정 교역량 많은 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말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면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위원장 임채정 글쎄 그러니까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또 우리의 대외적인 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아마 이란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취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겠지요.

구체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장관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국제적 무대에서 약한 고리로 보인다 이런 뜻이 될 텐데 지금 그 조치가 이루어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그렇게 밖에 말씀 못 하시는 것은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범 위원님!

○박성범 위원 아까 시간이 제약이 됐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한 질의는 서면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내일 오후부터 소위원회 예산 축조심의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의화 위원, 이화영 위원, 박성범 위원, 최병국 위원, 장영달 위원, 이성권 위원, 정의용 위원,

최성 위원, 정문현 위원, 김덕룡 위원, 전여옥 위원, 김부겸 위원, 김원웅 위원, 임종석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중 신계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고 이 두 안건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11월 8일 제9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산하 기관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권 영 길	김 덕 룡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원 웅	김 학 원	김 혁 규	박 계 동
박 성 범	신 계 른	신 기 남	유 선 호
이 성 권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채 정
장 영 달	정 문 헌	정 의 용	최 병 국
최 성	한 명 숙	홍 준 표	

○출장 위원(1인)

정 의 화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용 구
전 문 위 원	김 성 원

○정부측 참석자

외교통상부	반 기 문
장 관	반 기 문
외교안보연구원장	한 태 규
의 전 장	백 영 선
기획 관리 실장	김 성 환
외교정책홍보실	강 경 화
국제기구정책관	이 혁 혁
아시아·태평양국장	이 준 규
재외국민영사국장	김 중 균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	

○기타 참석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	사	장	권	인	혁
기	획	이	김	승	의
사	업	이	김	혜	원

한국국제협력단

총	재	신	장	범
총 무	기획 이사	이	현	주
개 발	사업 이사	이	해	균
인 력	사업 이사	김	상	태

재외동포재단

기	획	이	사	김	경	근
사	업	이	사	김	승	웅
감		사	주	진	엽	